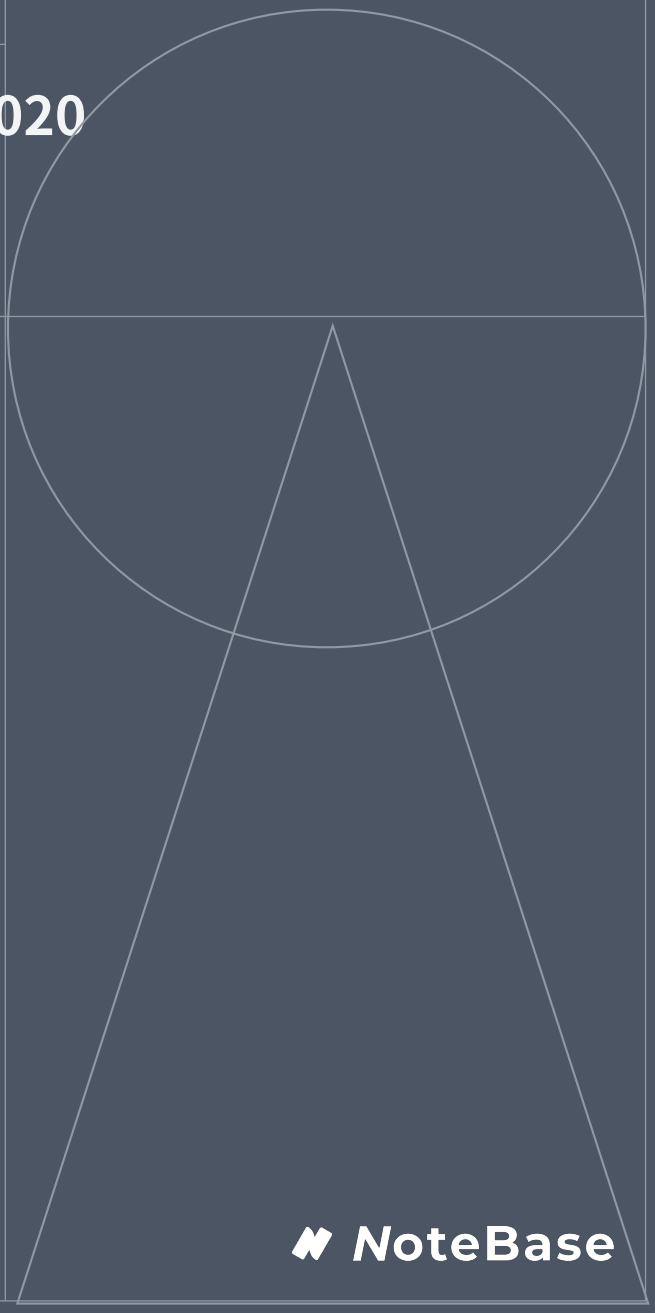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재정학 · 2020



NoteBas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재정학 · 2020

전문직/세무사 · 재정학 · 2020

문 1.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다른 조건이 일정하면, 대체재가 많은 재화에 과세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초과부담이 작다.

② 조세수입에서 후생감소분을 차감한 것이다.

③ 가격변화에 둔감한 재화에 대한 과세는 상대적으로 초과부담을 작게 발생시킨다.

④ 정액세(lump-sum tax) 부과는 소득효과가 없기 때문에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⑤ 두 재화가 완전보완재인 경우 그 중 한 재화에 대한 과세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킨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조세가 상대가격과 경제주체의 선택을 바꿀 때 발생하는 초과부담과 수요의 가격탄력성·대체효과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초과부담은 조세로 인한 총후생 감소분 가운데 정부의 조세수입을 초과하는 순후생손실이다. 조세가 상대가격을 변화시켜 소비 선택을 왜곡할수록 초과부담이 커진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가격에 민감하여 수요량이 크게 변하는 재화일수록 초과부담이 크고, 가격에 둔감하여 수요량 변화가 작은 재화일수록 초과부담이 작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대체재가 많으면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서 과세에 따른 수요량 변화와 거래 감소가 커지므로 초과부담도 커진다. 틀린 표현은 '초과부담이 작다'이며, 올바르게는 '초과부담이 크다'이다.
② X — 초과부담은 '조세수입에서 후생감소분을 차감한 것'이 아니라, 조세로 인한 총후생 감소분에서 조세수입을 차감한 순후생손실이다. 틀린 부분은 차감의 순서이다.
③ O — 가격변화에 둔감한 재화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아 과세 후 거래량 감소와 선택 왜곡이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초과부담도 작다.
④ X — 정액세는 납세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부과하므로 소득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아 대체효과와 선택 왜곡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소득효과가 없기 때문에'이며, 올바르게는 '대체효과가 없기 때문에'이다.
⑤ X — 완전보완재는 일정한 비율로 함께 소비되므로 한 재화의 상대가격이 변해도 두 재화 사이의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 재화에 대한 과세는 소득효과를 일으킬 수 있지만 초과부담은 발생시키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초과부담을 발생시킨다'이며, 올바르게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정액세는 초과부담이 없다'는 결론만 맞고 그 이유를 '소득효과가 없다'고 바꾼 함정이다. 초과부담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소득효과가 아니라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와 선택 왜곡이다. ⑤도 완전보완재에서는 상대가격이 변해도 재화 간 대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과세가 상대가격을 바꾸는지, 그 결과 수요량이나 소비 조합이 얼마나 크게 변하는지를 본다. 가격탄력성과 대체가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이 커지고, 대체효과가 없으면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탄력적 수요·대체재 많음은 초과부담 증가, 비탄력적 수요·대체효과 없음은 초과부담 감소 또는 없음이다.

NoteBase

문 2.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동등한 경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 수직적 공평이며, 부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 수평적 공평이라 한다.
ㄴ. 조세의 중립성은 조세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왜곡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조세의 간편성은 납세비용이나 조세행정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ㄷ. 조세부담의 귀착이란 법률상 납세의무자가 조세부담의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일시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최종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조세부담의 전가이다.
ㄹ. 인두세는 단기적으로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왜곡이 없는 조세이지만, 소득에 대해 역진적이기 때문에 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다.

① ㄴ
② ㄷ
③ ㄹ
④ ㄱ, ㄷ
⑤ ㄴ, ㄹ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조세의 공평성·중립성·간편성, 조세부담의 전가와 귀착, 인두세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평적 공평은 경제적 능력이 같은 사람을 같게 대우하는 것이고, 수직적 공평은 경제적 능력이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다.
조세의 중립성은 조세가 민간의 선택과 자원배분을 왜곡하지 않는 성질이고, 간편성은 납세협력비용과 조세행정비용이 적은 성질이다.
조세의 전가는 법률상 납세의무자가 가격 조정 등을 통해 부담을 다른 경제주체에게 옮기는 과정이고, 조세의 귀착은 그 결과 최종적으로 누가 실질적 부담을 지는지를 뜻한다.
인두세는 개인의 행동이나 소득과 무관한 정액세이므로 대체효과를 일으키지 않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대비 세부담이 커져 역진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ㄴ은 옳지만 ㄹ도 옳으므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틀린 부분은 ㄴ만 제시한 것이며, 올바른 조합은 ㄴ, ㄹ이다.

② X
ㄷ은 전가와 귀착의 뜻을 서로 뒤바꾸었다. 전가는 부담이 거래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과정이고, 귀착은 최종 부담자가 누구인지 나타내는 결과이다. 따라서 올바른 조합은 ㄴ, ㄹ이다.

③ X
ㄹ은 옳지만 ㄴ도 옳으므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틀린 부분은 ㄹ만 제시한 것이며, 올바른 조합은 ㄴ, ㄹ이다.

④ X
ㄱ과 ㄷ은 모두 틀리다. ㄱ은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을 서로 바꾸어 서술했고, ㄷ은 조세의 전가와 귀착을 서로 바꾸어 서술했다. 올바르게는 같은 경제적 능력에 같은 세부담을 지우는 것이 수평적 공평이고, 부담 이전은 전가이며 최종 부담의 소재는 귀착이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ㄹ이다.

⑤ O
ㄴ은 중립성과 간편성의 뜻을 정확히 설명한다. ㄹ도 인두세가 정액세이므로 대체효과에 따른 왜곡은 없지만 소득 대비 세부담이 역진적이라는 점을 정확히 설명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ㄹ이다.

오답 포인트

ㄱ은 '같은 사람은 같게'라는 수평적 공평과 '다른 사람은 다르게'라는 수직적 공평을 교체한 함정이다. ㄷ도 부담을 옮기는 과정인 전가와 최종 부담의 소재인 귀착을 교체했다. 또한 ㄴ이나 ㄹ 하나만 맞다고 판단하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조합형 문항에서 ① 또는 ③을 선택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진술의 O/X를 독립적으로 판정한 뒤 조합을 고른다. 공평성은 '같은 능력=수평, 다른 능력=수직', 조세부담은 '이전 과정=전가, 최종 부담=귀착'으로 구분한다. 정액 인두세는 대체효과가 없어 효율적이지만 역진적이어서 공평성은 낮다.

암기 포인트

같으면 수평, 다르면 수직이다. 옮기면 전가, 끝에 남으면 귀착이다. 인두세는 효율적이지만 역진적이다.

NoteBase

문 3.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이고, 과세 단위는 개인단위 과세와 부부합산 과세가 있다. 이러한 과세 단위가 가지는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단위 과세는 각 납세자의 지불능력을 잘 반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② 부부합산 과세는 가족이 경제활동의 기본 단위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③ 부부합산 과세의 경우, 주소득원과 그 배우자가 각각 직면한 한계세율은 동일하다.

④ 개인단위 과세의 경우, 주소득원과 그 배우자가 각각 직면한 한계세율은 상이하다.

⑤ 비탄력적인 부문에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는 램지원칙에 개인단위 과세보다 부부합산 과세가 더 잘 부합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누진적 개인소득세에서 개인단위 과세와 부부합산 과세가 담세력, 배우자의 한계세율, 노동공급의 탄력성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개인단위 과세: 부부라도 각 개인의 소득을 따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개인별 지불능력을 반영하며, 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한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부부합산 과세: 부부의 소득을 합쳐 하나의 과세 단위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가족을 경제생활의 기본 단위로 보고, 어느 배우자가 추가로 소득을 얻더라도 합산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은 같다.
램지원칙: 효율성 측면에서 세율은 과세 대상의 반응이 작을수록, 즉 탄력성이 낮을수록 높게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개인단위 과세는 각 사람의 소득을 별도로 과세하므로 개인별 지불능력을 과세에 반영하기 쉽다.
② O. 부부합산 과세는 부부를 하나의 공동생활 단위로 보므로 가족이 경제활동의 기본 단위라는 관점에 기초한다.
③ O. 부부합산 과세에서는 두 배우자의 소득이 하나로 합쳐져 동일한 누진세율표의 적용을 받으므로, 주소득원과 배우자의 추가 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동일하다.
④ O. 개인단위 과세에서는 각자의 소득에 별도로 누진세율표를 적용하므로,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다른 주소득원과 배우자가 직면하는 한계세율도 달라진다.
⑤ X. 틀린 표현은 '개인단위 과세보다 부부합산 과세가 더 잘 부합한다'이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노동공급은 주소득원의 노동공급보다 탄력적이므로, 두 사람에게 같은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부부합산 과세는 램지원칙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탄력성이 낮은 주소득원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탄력성이 높은 배우자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개인단위 과세가 램지원칙에 더 잘 부합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⑤는 부부합산 과세가 가족의 담세력을 반영한다는 장점과 램지원칙에 따른 효율성을 혼동하게 만든다. 램지원칙의 판단 기준은 가족 단위 여부가 아니라 각 소득원의 노동공급 탄력성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과세 단위 문제에서는 먼저 소득을 개인별로 분리하는지 부부가 합산하는지를 확인한다. 그다음 한계세율은 개인단위 과세에서 서로 달라질 수 있고 부부합산 과세에서는 같다는 점을 적용한다. 램지원칙이 나오면 노동공급이 덜 탄력적인 쪽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다.

암기 포인트

개인은 소득도 세율도 따로, 부부합산은 소득도 세율도 함께이다. 램지는 비탄력적이면 높게, 탄력적이면 낮게이다.

NoteBase

문 4. 소득세 누진구조에 대한 에지워스(F. Edgeworth) 최적분배모형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이 모형에 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정 1: 주어진 세수를 충족시키면서 개인들의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최적 소득세를 결정한다.
가정 2: 개인들은 자신의 소득에만 의존하는 동일한 효용함수를 가지며, 효용함수는 한계효용 체감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 3: 사회 전체의 가용한 소득은 고정되어 있다.

① 가정 1은 공리주의적인 사회후생함수를 가정하였음을 의미한다.

② 가정 2는 이타적인 효용함수를 배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③ 가정 3은 분배상태가 변화할 때 총소득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④ 가장 높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가장 낮은 소득자에게 재분배하는 경우 사회후생은 증가하게 된다.

⑤ 가정 2로 인해 최적 소득세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소득 균등화까지 이르지는 못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에지워스의 최적분배모형은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 동일하고 한계효용이 체감하는 효용함수, 고정된 총소득이라는 가정 아래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판단하는 모형이다.

핵심 정리

사회후생은 개인 효용의 합으로 정의된다. 모든 개인의 효용함수가 동일하고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하며 총소득이 고정되어 있다면, 고소득자의 소득 1단위를 저소득자에게 이전할 때 저소득자의 효용 증가가 고소득자의 효용 감소보다 크다. 따라서 사회후생은 소득이 완전히 균등해질 때 극대화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개인들의 효용을 합산하여 그 합을 극대화한다는 가정은 사회후생을 개인 효용의 합으로 보는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를 뜻한다.
② O. 효용이 자신의 소득에만 의존하므로 다른 사람의 소득이나 효용을 고려하는 이타적 효용은 배제된다.
③ O. 총소득을 고정하면 재분배가 노동공급·생산·저축 등의 유인을 바꾸어 총소득 자체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④ O. 한계효용이 체감하므로 고소득자의 소득 1단위가 주는 한계효용보다 저소득자가 그 1단위를 받을 때 얻는 한계효용이 더 크다. 따라서 고소득자에게서 저소득자에게 소득을 이전하면 균등화에 도달하기 전까지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⑤ X. 틀린 표현은 '최적 소득세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소득 균등화까지 이르지는 못한다'이다. 올바르게는 가정 2의 동일한 효용함수와 한계효용 체감에 가정 3의 고정된 총소득을 함께 적용하면 완전한 소득 균등화에서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현실의 최적소득세에서는 노동공급 왜곡과 효율성 손실 때문에 완전한 균등화가 최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에지워스 모형의 결론과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의 가정 3은 총소득을 고정하여 그러한 유인효과를 배제하므로, 모형 안에서는 완전한 균등화가 결론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효용의 합 극대화 + 동일한 효용함수 + 한계효용 체감 + 총소득 고정'이 제시되면 고소득자에서 저소득자로의 이전이 사회후생을 높이고, 최종적으로 완전한 소득 균등화가 도출된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에지워스 최적분배모형은 공리주의·동일 효용·한계효용 체감·총소득 고정에서 완전 균등화를 도출한다.

NoteBase

문 5. 조세의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이 일치하는 경우는?

① 수요곡선은 우상향하고 공급곡선은 우하향할 때, 소비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②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할 때, 생산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③ 수요곡선은 수직이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할 때, 소비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④ 수요 및 공급의 탄력성이 모두 단위탄력적일 때, 생산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⑤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이 수평일 때, 생산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조세를 납부할 법적 의무를 지는 사람과 시장의 가격 조정을 거쳐 실제 조세부담을 지는 사람이 일치하는 조건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법적 귀착은 법률상 세금을 납부하도록 지정된 주체를 뜻하고, 경제적 귀착은 과세 후 가격 변화로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실제 부담을 지는 주체를 뜻한다.
조세의 경제적 부담은 법적 납세자가 누구인지보다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결정된다. 더 비탄력적인 쪽이 더 큰 부담을 지며,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면 소비자가 전부 부담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수요곡선이 우상향하고 공급곡선이 우하향하더라도 소비자 과세분 전부가 소비자에게 남는 것은 아니다. 과세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상승하고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하락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양쪽에 나뉜다. 틀린 표현은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이 일치'한다는 전제이며, 올바르게는 소비자에게 법적으로 과세해도 소비자와 생산자가 부담을 나누게 된다.
② X — 일반적인 우하향 수요와 우상향 공급에서는 생산자에게 법적으로 과세해도 가격 조정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조세를 나누어 부담한다. 틀린 표현은 '생산자에게 과세하면 귀착이 일치한다'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두 곡선의 탄력성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분담된다.
③ O — 수요곡선이 수직이면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어서 소비자는 가격이 올라도 수요량을 줄이지 않는다. 소비자에게 부과한 세금 전부를 소비자가 부담하므로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이 모두 소비자에게 있다.
④ X —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모두 1이면 양쪽의 상대적 탄력성이 같아 조세부담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동일하게 분담된다. 틀린 표현은 '생산자에게 과세하면 귀착이 일치한다'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법적 귀착은 생산자에게 있지만 경제적 귀착은 양쪽에 절반씩 분담된다.
⑤ X — 공급곡선이 수평이면 공급이 완전탄력적이어서 생산자는 조세부담을 지지 않고 세금을 가격에 전가한다. 틀린 표현은 '생산자에게 과세하면 생산자가 실제로 부담한다'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법적 귀착은 생산자에게 있지만 경제적 귀착은 소비자에게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는지가 실제 부담자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특히 ⑤는 생산자에게 과세한다는 문구와 달리, 수평인 공급곡선 때문에 생산자가 세금을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법적 납세자를 확인한 뒤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쪽이 더 비탄력적인지 판단한다. 한쪽이 완전비탄력적이면 그쪽이 전부 부담하고, 한쪽이 완전탄력적이면 반대쪽이 전부 부담한다. 그 실제 부담자가 법적 납세자와 같을 때 두 귀착이 일치한다.

암기 포인트

법적 귀착은 납부 의무, 경제적 귀착은 실제 부담이며, 세금은 더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이 부담한다.

NoteBase

문 6. 일반적으로 조세는 시장의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초과부담을 발생시킨다. 다음 중 조세의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상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가부동산 거래에 고율 과세하는 경우
ㄴ. 부유층이 주로 소비하는 재화에 10%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경우
ㄷ.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제품의 사회적 최적생산수준에서 한계환경피해비용과 세율이 같아지도록 과세하는 경우
ㄹ. 공급은 완전비탄력적이고 수요는 완전탄력적일 때, 생산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조세가 거래량을 줄여 초과부담을 만드는 경우와 외부효과를 교정하거나 거래량이 변하지 않아 초과부담이 생기지 않는 경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초과부담은 조세 때문에 소비·생산·거래량이 효율적인 수준에서 벗어나면서 조세수입을 넘어서 추가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손실이다.
ㄱ: 고가부동산 거래에 대한 고율 과세는 거래를 위축시켜 자원배분을 왜곡하므로 일반적으로 초과부담이 발생한다.
ㄴ: 특정 재화에 대한 소비세는 그 재화의 상대가격을 높여 소비 선택과 거래량을 바꾸므로 일반적으로 초과부담이 발생한다. 부유층이 주로 소비한다는 사실은 형평성과 관련될 수 있지만 초과부담을 없애지는 않는다.
ㄷ: 세율을 사회적 최적생산수준에서의 한계환경피해비용과 같게 정한 피구세는 오염의 외부비용을 가격에 반영하여 생산량을 사회적 최적수준으로 이동시키므로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ㄹ: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과세 후에도 공급량과 거래량이 변하지 않는다. 수요가 완전탄력적인 상황에서 생산자에게 과세하면 생산자가 세금을 부담하지만 거래량 감소가 없으므로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ㄴ은 모두 과세로 거래량과 자원배분이 달라져 초과부담이 발생한다. 틀린 조합은 'ㄱ, ㄴ'이며,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올바른 조합은 'ㄷ, ㄹ'이다.
② X — ㄷ은 외부효과를 교정하므로 맞지만, ㄱ은 고율 과세로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어 초과부담이 발생한다. 틀린 항목은 ㄱ이며, 올바르게는 ㄹ이 포함되어 'ㄷ, ㄹ'이 된다.
③ X — ㄷ은 맞지만, ㄴ의 소비세는 상대가격과 소비 선택을 왜곡하므로 초과부담이 발생한다. 틀린 항목은 ㄴ이며, 올바르게는 ㄹ이 포함되어 'ㄷ, ㄹ'이 된다.
④ X — ㄹ은 거래량이 변하지 않아 맞지만, ㄴ은 특정 재화의 소비를 왜곡하므로 초과부담이 발생한다. 틀린 항목은 ㄴ이며, 올바르게는 ㄷ이 포함되어 'ㄷ, ㄹ'이 된다.
⑤ O — ㄷ의 피구세는 환경 외부효과를 교정하고, ㄹ의 과세는 완전비탄력적 공급 때문에 거래량을 줄이지 않는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ㄴ에서 부유층이 주로 소비한다는 말은 조세의 형평성이나 누진성에 관한 단서일 뿐 효율성 손실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또한 세금의 법적 납부자가 생산자라는 사실만으로 초과부담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과세 뒤 거래량이 실제로 변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과세가 거래량을 줄이는지 확인한다. 거래량이 감소하면 일반적으로 초과부담이 생기고, 완전비탄력적 수요·공급처럼 거래량이 변하지 않으면 초과부담이 없다.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교정세가 사적 한계비용에 외부비용을 반영하여 사회적 최적수준을 달성하는지도 함께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거래량 불변이면 초과부담 없음, 외부비용만큼의 피구세는 왜곡이 아니라 교정이다.

NoteBase

문 7. 래퍼곡선(Laffer curv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율을 높임에 따라 조세수입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② 특정한 조세수입액에 대하여 한 개의 세율만 존재한다.

③ 세율을 가로축에, 조세수입을 세로축에 두고 래퍼곡선을 그리면 단조증가하는 형태가 된다.

④ 세율이 적정 수준보다 높아지는 경우에는 조세 수입이 감소한다.

⑤ 조세의 효율성보다는 형평성과 관련된 논의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래퍼곡선에서 세율과 조세수입의 관계가 전 구간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래퍼곡선은 세율이 낮은 구간에서는 세율 인상이 조세수입을 늘릴 수 있지만,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는 세율을 넘으면 경제활동과 과세표준이 위축되어 오히려 조세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일반적인 형태는 중간에서 정점을 갖는 역 U자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조세수입이 계속 증가한다'이다. 세율이 조세수입 극대화 수준을 넘으면 과세표준이 줄어 조세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 올바르게는 세율 인상에 따라 조세수입이 처음에는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 이후에는 감소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한 개의 세율만 존재한다'이다. 역 U자형 곡선에서는 최대 조세수입보다 작은 동일한 조세수입액에 대응하는 세율이 낮은 쪽과 높은 쪽에 각각 존재할 수 있다. 올바르게는 특정 조세수입액에 대하여 두 개의 세율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단조증가하는 형태'이다. 세율을 가로축, 조세수입을 세로축에 두면 곡선은 일정 세율까지 상승한 뒤 하락하는 역 U자형이 된다.

④ O
세율이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는 적정 수준보다 높아지면 근로·투자 등의 유인이 약화되고 과세표준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조세수입이 감소한다.

⑤ X
틀린 표현은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이다. 래퍼곡선은 높은 세율이 경제활동과 과세표준에 미치는 유인 효과를 통해 조세수입이 변하는 관계를 다루므로 주로 조세의 효율성과 관련된다. 올바르게는 형평성보다는 효율성 측면의 논의라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세율이 오르면 조세수입도 언제나 늘어난다고 보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①과 ③은 과세표준이 고정되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②는 역 U자형 곡선의 양쪽에서 같은 조세수입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게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세율 인상 효과를 판단할 때에는 세율 자체뿐 아니라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과세표준 감소를 함께 본다. '계속 증가'나 '단조증가'라는 표현이 나오면 조세수입 극대화 세율 이후의 하락 구간과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래퍼곡선은 역 U자형이며, 세율이 정점을 넘으면 조세수입은 감소한다.

NoteBase

문 8. 다음은 순수독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시장의 수요함수이다. $Q = 200 - 4P$ **그리고 이 시장의 독점공급자인 A사의 총비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TC = \frac{1}{4}Q^2 + 10Q + 75$ **정부가 소비자에게 단위당 10만큼의 물품세를 부과한다고 할 때,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Q는 수량, P는 가격, TC는 총비용이다.)**

ㄱ. 독점공급자는 조세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으므로 세금은 모두 소비자가 부담한다.
ㄴ. 독점공급자의 조세부담이 소비자의 조세부담보다 3배 더 크다.
ㄷ. 조세부담의 크기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동일하다.
ㄹ. 독점공급자의 조세부담이 소비자의 조세부담의 1/3이다.
ㅁ. 동일한 세금을 소비자 대신 공급자에게 부과해도 조세부담 귀착의 결과는 같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ㅁ
⑤ ㄹ, ㅁ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소비자에게 단위세가 부과될 때 독점기업의 세후 이윤극대화 산출량과 소비자가격·공급자수취가격을 구하고, 과세 전 가격과 비교하여 조세부담의 귀착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역수요함수는 $P = 50 - \frac{1}{4}Q$이고 한계비용은 $MC = \frac{dTC}{dQ} = \frac{1}{2}Q + 10$이다. 소비자가격을 P_c, 공급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을 P_s라고 하면 단위세 10 때문에 $P_c - P_s = 10$이다. 조세부담은 과세 전 독점가격과 과세 후의 P_c, P_s를 비교하여 구한다. 총비용의 고정비 75는 한계비용과 이윤극대화 산출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독점기업은 공급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은 $MR = MC$에서 산출량을 정한다.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해도 공급자가 받는 단위당 금액은 $P_s = P_c - 10$이므로, 세후 총수입은 $TR = P_sQ$로 계산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과세 전에는 $TR = (50 - \frac{1}{4}Q)Q$이므로 $MR = 50 - \frac{1}{2}Q$이다. 따라서
$50 - \frac{1}{2}Q = \frac{1}{2}Q + 10$
에서 $Q_0 = 40$, $P_0 = 40$이다.

2. 과세 후 공급자수취가격은
$P_s = P_c - 10 = 40 - \frac{1}{4}Q$
이므로 $MR = 40 - \frac{1}{2}Q$이다. 따라서
$40 - \frac{1}{2}Q = \frac{1}{2}Q + 10$
에서 $Q_1 = 30$이다. 이때 $P_c = 50 - \frac{30}{4} = 42.5$, $P_s = 42.5 - 10 = 32.5$이다.

3. 소비자 부담은 단위당 $42.5 - 40 = 2.5$, 공급자 부담은 단위당 $40 - 32.5 = 7.5$이다. 따라서 공급자 부담은 소비자 부담의 3배이다. 또한 세금을 어느 쪽에 법적으로 부과하더라도 $P_c - P_s = 10$이라는 가격쐐기는 같으므로 조세부담의 경제적 귀착도 같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과 ㅁ이다.

선지 판단

① X — ㄴ은 옳지만 ㄱ은 틀리다. 독점공급자가 세금을 전부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는 2.5, 공급자는 7.5를 부담한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 아니라 ㄴ, ㅁ이다.

② X — ㄱ과 ㄷ이 모두 틀리다. 소비자와 공급자의 부담은 각각 2.5와 7.5로 같지 않으며, 세금 전부를 소비자가 부담하지도 않는다. 올바른 조합은 ㄴ, ㅁ이다.

③ X —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소비자와 공급자의 부담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공급자 부담이 소비자 부담의 3배이다. ㄷ을 ㅁ으로 바꾸어 ㄴ, ㅁ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 공급자는 7.5, 소비자는 2.5를 부담하므로 ㄴ이 옳고, 납세의무자를 바꾸어도 동일한 가격쐐기가 생기므로 ㅁ도 옳다.

⑤ X — ㅁ은 옳지만 ㄹ은 부담비율을 거꾸로 표현하였다. 공급자 부담은 소비자 부담의 $\frac{1}{3}$이 아니라 3배이므로 ㄹ을 ㄴ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했다는 법적 납세의무와 실제 경제적 부담을 혼동하면 ㄱ을 고르게 된다. 실제 부담은 과세 전 가격 40을 기준으로 소비자가격의 상승분 2.5와 공급자수취가격의 하락분 7.5를 각각 계산해야 한다. 또한 ㄹ은 공급자 부담과 소비자 부담의 비율을 뒤집은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위세의 귀착 문제에서는 과세 전 균형을 먼저 구하고, 과세 후에는 소비자가격과 공급자수취가격 사이에 세액만큼의 쐐기를 넣어 새 균형을 구한다. 그다음 과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소비자가격 상승분과 공급자수취가격 하락분을 비교하면 실제 부담과 부담비율이 결정된다.

암기 포인트

법적으로 누가 세금을 내는지와 경제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는 다르다. 이 문항에서는 소비자 2.5, 공급자 7.5로 공급자 부담이 소비자 부담의 3배이다.

NoteBase

문 9. 콜렛-헤이그(Corlett-Hague) 조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가에 보완적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과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여가에 과세가 가능하다.

②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여가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한다.

③ 여가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원칙이다.

④ 여가에 보완적인 상품에 대해 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가 세율의 차등을 두는 물품세보다 우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콜렛-헤이그 조세원칙이 여가에 대한 직접 과세의 어려움을 어떤 상품의 차등과세로 보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콜렛-헤이그 조세원칙은 직접 과세하기 어려운 여가를 간접적으로 과세하기 위해 여가와 보완관계에 있는 상품·서비스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여가보완재의 소비는 여가와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 소비에 과세하면 여가의 실질적인 비용을 높이는 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이 원칙은 모든 상품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기보다 여가와의 보완·대체 관계에 따라 물품세율을 차등화할 근거가 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여가와 함께 소비되는 보완재에 과세하면 여가의 실질적인 비용이 높아지므로 여가를 간접적으로 과세할 수 있다.
② O — 노동소득에는 과세하면서 여가에는 과세하지 않으면 노동과 여가 사이의 선택이 왜곡된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여가에도 과세하는 효과가 필요하다.
③ O — 여가의 양이나 가치를 직접 관찰하여 과세하기 어렵다는 현실에서 출발한 원칙이다. 그래서 관찰 가능한 여가보완재에 과세한다.
④ O — 여가보완재에는 다른 상품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여가를 간접적으로 과세하는 수단이 되므로 바람직하다.
⑤ X — 틀린 부분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가 세율의 차등을 두는 물품세보다 우월할 수 있다'는 표현이다. 이 원칙은 오히려 여가와의 보완관계에 따라 물품세율을 차등화하면 여가를 간접적으로 과세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뜻한다. 올바르게는 '여가에 대한 직접 과세가 불가능할 때 여가보완재에 상대적으로 높은 물품세율을 적용하는 차등과세가 일률적인 과세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⑤는 소득세와 차등 물품세의 우열을 반대로 서술한 선지이다. 콜렛-헤이그 원칙의 결론은 동일세율 과세의 우월성이 아니라 여가보완재에 대한 상대적 고율과세의 정당화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여가에 직접 과세할 수 없는 상황인지 확인한다. 그다음 여가와 함께 소비되는 보완재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방향이면 옳고, 모든 상품의 동일세율이나 소득세의 우월성을 결론으로 제시하면 틀린 것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여가 직접과세 불가 → 여가보완재 고율과세 → 여가 간접과세이다.

NoteBase

문 10. A와 B, C와 D는 각각 부부이며, 두 가구의 소득과 소득세액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구		개인소득	개인 소득세액	가구 총소득	개인소득세액 합계	가구 합산 시 세액
1	A	1억원	4천만원	1억2천만원	4천1백만원	4천9백만원
	B	2천만원	1백만원			
2	C	6천만원	1천2백만원	1억2천만원	2천4백만원	4천9백만원
	D	6천만원	1천2백만원			

ㄱ. 가구합산을 하는 경우, 결혼세(marriage tax)의 문제가 발생한다.
ㄴ. 세율 체계의 누진성, 조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 결혼에 대한 중립성은 동시에 만족될 수 없다.
ㄷ. 결혼세의 문제는 세율체계의 누진성 때문에 발생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개인별 과세와 가구합산 과세의 세액을 비교하여 결혼세의 발생 여부와 누진성·수평적 형평성·결혼 중립성 사이의 충돌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두 가구의 총소득이 모두 1억 2천만원으로 같다는 점을 확인한다.
2. 개인소득세액 합계와 가구합산 시 세액을 비교한다.
3. 같은 총소득에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수평적 형평성과, 결혼 전후 세부담이 달라지지 않는 결혼 중립성을 함께 검토한다.

NoteBase

핵심 근거

가구 1의 개인소득세액 합계는 4천 1백만원이지만 가구합산 시 세액은 4천 9백만원이므로 결혼으로 세부담이 8백만원 증가한다. 가구 2도 개인소득세액 합계가 2천 4백만원에서 4천 9백만원으로 늘어나므로 결혼세가 발생한다. 두 가구는 총소득이 같지만 개인별 과세에서는 소득 분배에 따라 세액 합계가 달라지고, 가구합산 과세에서는 같은 세액을 부담하는 대신 결혼 전보다 세부담이 증가한다. 이는 누진세율 아래에서 수평적 형평성과 결혼 중립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옳지만 ㄴ과 ㄷ도 모두 옳으므로 불완전한 조합이다. 'ㄱ'은 'ㄱ, ㄴ, ㄷ'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ㄱ과 ㄴ은 옳지만 ㄷ도 옳으므로 불완전한 조합이다. 'ㄱ, ㄴ'은 'ㄱ, ㄴ, ㄷ'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ㄱ과 ㄷ은 옳지만 ㄴ도 옳으므로 불완전한 조합이다. 'ㄱ, ㄷ'은 'ㄱ, ㄴ, ㄷ'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ㄴ과 ㄷ은 옳지만 ㄱ도 옳으므로 불완전한 조합이다. 'ㄴ, ㄷ'은 'ㄱ, ㄴ, ㄷ'으로 고쳐야 한다.
⑤ O — ㄱ은 두 가구 모두 가구합산 시 세액이 개인소득세액 합계보다 커지므로 옳다. ㄴ은 누진성을 유지하면서 같은 가구소득에 같은 세금을 부과하면 결혼 전후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옳다. ㄷ은 부부의 소득을 합산할 때 적용세율이 높아질 수 있는 누진세율 구조가 결혼세를 발생시키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가구 1만 보고 결혼세를 확인한 뒤 ㄱ만 고르거나, ㄴ을 표와 무관한 추상적 진술로 보아 제외하기 쉽다. 그러나 같은 총소득의 두 가구가 개인별 과세에서 서로 다른 세액을 부담한다는 사실과, 가구합산 시 두 가구의 세액은 같아지지만 각 가구의 세부담은 증가한다는 사실을 함께 읽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결혼 전 개인세액의 합계와 결혼 후 가구합산 세액을 비교한다. 합산 세액이 더 크면 결혼세이다. 이어 같은 가구 총소득에 같은 세액이 부과되는지로 수평적 형평성을, 결혼 전후 세액이 같은지로 결혼 중립성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누진세율 아래에서는 가구합산 과세의 수평적 형평성과 결혼 중립성이 충돌할 수 있으며, 합산 후 세액 증가가 결혼세이다.

NoteBase

문 11. 분권화된 체제에서의 지방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발전을 위한 조세경쟁이 발생한다.

② 조세수출이 발생한다.

③ 지방세율 차이로 인해 지역의 물가가 달라질 수 있다.

④ 지역 간 형평성을 위해서는 지방세율이 동일해야 한다.

⑤ 지방세는 주로 이동성이 작은 자산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분권화된 체제에서 지방정부의 과세 자율성이 조세경쟁·조세수출·지역 간 가격 차이와 과세표준의 이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세경쟁은 지방정부가 이동 가능한 주민이나 기업·자본을 유치하려고 세율과 공공서비스 수준을 경쟁적으로 조정하는 현상이다.
조세수출은 한 지역이 부과한 세금의 부담이 재화가격 상승 등을 통해 다른 지역의 주민에게 전가되는 현상이다.
지방세는 지역 간 이동에 따른 왜곡과 세원 유출이 작도록 토지·부동산처럼 이동성이 낮은 과세표준에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 지방정부는 기업·자본·주민을 유치하고 지역의 세원을 확대하려고 세율 인하나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경쟁할 수 있으므로 지역발전을 위한 조세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② O — 지방정부가 관광객이나 역외 소비자·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세금을 부과하면 세 부담의 일부가 비거주자에게 전가되는 조세수출이 발생할 수 있다.
③ O — 지역마다 지방세율이 다르면 세후 가격이나 생산비가 달라지고 그 차이가 재화·서비스 가격 등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지역의 물가가 달라질 수 있다.
④ X — 틀린 표현은 '지역 간 형평성을 위해서는 지방세율이 동일해야 한다'이다. 지역별 세원 규모와 재정수요가 다르므로 동일 세율만으로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지방세율은 지역의 편익·비용과 자율적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역 간 재정력 격차는 재정조정제도 등을 함께 활용해 완화한다.
⑤ O — 토지·부동산처럼 이동성이 작은 자산은 세율 차이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어렵다. 따라서 세원 이탈과 지역 간 조세경쟁으로 인한 왜곡을 줄일 수 있어 지방세의 과세대상으로 적합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형평성'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럴듯하지만, 형평성을 '모든 지역의 동일 세율'과 같은 뜻으로 바꾼 것이 함정이다. 과세표준과 재정수요가 서로 다른 지역에 같은 세율을 적용해도 주민의 부담과 공공서비스 수준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방세 선지는 세원이 지역 간에 이동할 수 있는지, 세 부담이 비거주자에게 넘어가는지, 지역별 세율 선택이 허용되는지를 차례로 판단한다. 이동성이 큰 세원은 조세경쟁과 세원 유출을 낳기 쉽고, 이동성이 작은 세원은 지방세에 더 적합하다.

암기 포인트

분권화된 지방세의 핵심은 '세율 자율성, 조세경쟁·조세수출 가능, 이동성 낮은 세원 선호'이다. 형평성이 곧 전국 동일 세율을 뜻하지는 않는다.

NoteBase

문 12. 경제 내 모든 가격이 동일한 율로 인상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① 면세점 이상 구간에 대해서만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
② 기업 이윤에 대한 단일세율의 과세
③ 누진적인 개인소득세
④ 누진적인 양도소득세
⑤ 누진적인 재산세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모든 가격이 같은 비율로 오를 때 명목 과세표준도 같은 비율로 커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면세점·과세구간 같은 명목 기준 때문에 실질 조세부담이 달라지는 세제와 단일세율로 비례 과세하는 세제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실질 조세부담은 납부세액의 구매력 기준 부담이다. 물가와 명목소득이 같은 비율로 상승하더라도 면세점이나 누진세율 구간이 명목액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납세자가 더 높은 과세 범위나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여 실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반면 면세점이나 누진구간 없이 전체 과세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이 물가와 같은 비율로 움직이므로 실질 부담은 변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면세점 이상 구간에 대해서만'이라는 조건 때문에 실질 부담이 영향을 받는다. 명목액으로 고정된 면세점의 실질가치는 인플레이션으로 낮아져 과세 대상 소득의 비중이 커진다. 올바르게는 면세점이 물가에 연동되지 않은 단일세율 소득세의 실질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② O — 기업 이윤 전체에 면세점이나 누진구간 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모든 가격과 명목이윤이 같은 비율로 상승할 때 세액도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 따라서 세액의 실질가치와 실질이윤 대비 세부담은 변하지 않는다.
③ X — '누진적인' 개인소득세는 명목소득 상승으로 납세자를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시키는 구간 상승 효과가 발생한다. 올바르게는 과세구간이 물가에 연동되지 않으면 실질소득이 그대로여도 실질 조세부담이 증가한다.
④ X — '누진적인' 양도소득세는 자산가격의 명목 상승으로 명목 양도차익이 커지고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어 실질 부담이 영향을 받는다. 올바르게는 물가상승분을 과세표준과 세율 구간에 반영하지 않으면 실질 조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⑤ X — '누진적인' 재산세는 재산의 명목가액 상승으로 과세표준이 커지고 더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갈 수 있어 실질 부담이 영향을 받는다. 올바르게는 과세표준과 세율 구간이 물가에 연동되지 않으면 실질 조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도 세율 자체는 단일세율이지만 면세점이라는 고정된 명목 기준이 있으므로 ②와 같지 않다. 또한 ③~⑤의 누진세는 실질 소득이나 실질 재산이 늘지 않아도 명목 과세표준 상승만으로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면세점·공제액·누진구간처럼 고정된 명목 기준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러한 기준이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실질 부담을 바꿀 수 있고, 기준 없이 전체 과세표준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실질 부담은 유지된다.

암기 포인트

고정된 면세점·누진구간은 인플레이션에 취약하고, 기준 없는 단일 비례세는 실질 부담이 불변이다.

NoteBase

문 13.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지불액만 공제된다고 하자. 이러한 과세방식으로 인한 법인의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기자본에 비해 차입을 선호한다.

② 배당금에 비해 사내유보를 선호한다.

③ 회사채 발행을 기피한다.

④ 현금자산 보유를 기피한다.

⑤ 부동산 보유를 기피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타인자본 이자만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때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에 생기는 세제상 편향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자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면 차입에 따른 이자 지급은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절세효과를 낳는다. 반면 자기자본의 대가인 배당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타인자본의 세후 조달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기업은 자기자본보다 차입을 선호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차입금 이자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므로 이자만큼 과세소득이 줄어든다. 배당 등 자기자본의 대가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자기자본보다 차입을 선호하게 된다.
② X — 틀린 표현은 '배당금에 비해 사내유보를 선호한다'이다. 배당과 사내유보는 모두 이자비용처럼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제시된 법인세 과세방식만으로는 사내유보가 배당보다 우대된다고 할 수 없다. 올바르게는 '배당과 사내유보 사이의 선택에는 이자 공제와 같은 직접적인 세제상 차이가 없다'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회사채 발행을 기피한다'이다. 회사채는 타인자본이고 회사채 이자는 공제되므로 오히려 회사채 발행을 포함한 차입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올바르게는 '회사채 발행을 선호할 유인이 생긴다'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현금자산 보유를 기피한다'이다. 이자 공제는 자산의 종류가 아니라 자금조달 방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현금자산 보유를 일반적으로 기피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 올바르게는 '현금자산 보유 여부는 이자 공제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부동산 보유를 기피한다'이다. 이자 공제는 타인자본 조달을 우대할 뿐 특정 실물자산인 부동산의 보유를 불리하게 만드는 규정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부동산 보유 여부는 이자 공제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자 공제’를 자산 선택이나 이익 처분의 문제로 확대하는 것이 함정이다. 공제되는 것은 차입의 대가인 이자이므로 직접적인 왜곡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사이의 자금조달 선택에서 발생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과세표준에서 어떤 비용이 공제되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이자만 공제되면 ‘차입의 세후 비용 하락 → 타인자본 선호’로 연결하고, 별도 조건이 없는 자산 보유나 배당·유보 선택으로 효과를 확장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이자 공제는 부채의 절세효과를 만들고, 부채 편향을 낳는다.

NoteBase

문 14. 피셔(I. Fisher)의 시점간 자원배분 모형에서 이자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둘 다 정상재이다.)

① 미래소비는 감소하게 된다.

② 저축은 반드시 감소한다.

③ 현재소비에 대한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를 감소시킨다.

④ 현재소비에 대한 소득효과는 현재소비를 증가시킨다.

⑤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면 현재 소비의 상대가격이 높아진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자소득세로 세후이자율이 하락할 때 저축자의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에 나타나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면 세후이자율은 r에서 $r(1-t)$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현재소비 1단위의 기회비용인 미래소비량은 $1+r$에서 $1+r(1-t)$로 감소하므로 현재소비는 상대적으로 싸지고 미래소비는 상대적으로 비싸진다.
대체효과: 현재소비는 증가하고 미래소비는 감소한다.
소득효과: 이자소득을 얻는 저축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므로, 두 소비가 모두 정상재일 때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가 모두 감소한다.
따라서 미래소비는 두 효과가 모두 감소 방향이어서 반드시 감소하지만, 현재소비와 저축은 두 효과가 반대 방향이어서 변화가 확정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미래소비는 대체효과로 감소하고,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효과로도 감소한다. 따라서 미래소비는 감소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저축은 반드시 감소한다'이다.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를 늘려 저축을 감소시키지만, 소득효과는 현재소비를 줄여 저축을 증가시키므로 저축의 최종 변화는 불확정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를 감소시킨다'이다. 세후이자율 하락으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이 낮아지므로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를 증가시킨다.
④ X — 틀린 표현은 '소득효과는 현재소비를 증가시킨다'이다. 이자소득세로 저축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현재소비가 정상재이므로 소득효과는 현재소비를 감소시킨다.
⑤ X — 틀린 표현은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이 높아진다'이다. 이자소득세는 세후이자율을 낮추므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은 낮아지고 미래소비의 상대가격은 높아진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세후이자율 하락만 보고 저축이 반드시 감소한다고 단정하기 쉽다. 그러나 현재소비에 대한 대체효과는 증가 방향이고 소득효과는 감소 방향이므로 현재소비와 저축의 순변화는 불확정이다. 반면 미래소비는 두 효과가 모두 감소 방향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세후이자율 하락을 확인한 뒤 상대가격효과와 실질소득효과를 나누어 판단한다. 저축자에게는 '대체효과: 현재소비 증가·미래소비 감소', '소득효과: 두 소비 모두 감소'로 정리하면 미래소비의 감소만 확정된다.

암기 포인트

이자소득세는 세후이자율을 낮춘다. 미래소비는 반드시 감소하고, 현재소비와 저축은 불확정이다.

NoteBase

문 15.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소득세 부과의 노동 공급에 대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② 헤이그-사이먼즈(Haig-Simons)의 포괄적 소득 정의에 따르면, 소비도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③ 비례소득세는 수직적 공평성을 제고시킨다.

④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소득효과는 저축에 대한 매력을 상대적으로 감소시켜 저축의욕을 떨어뜨린다.

⑤ 수평적 공평성을 중시하는 누진적인 소득세에서는 과세기준이 되는 소득이 증가하면, 세금부담액은 증가하고 평균세율은 감소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소득세가 노동공급과 저축에 미치는 소득효과·대체효과, 헤이그-사이먼즈의 포괄적 소득, 비례세와 누진세의 공평성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헤이그-사이먼즈의 포괄적 소득은 일정 기간의 소비와 순자산 증가액을 합한 경제적 능력의 증가분이다. 따라서 저축된 부분뿐 아니라 소비된 부분도 소득에 포함된다.
비례소득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평균세율이 일정하고, 누진소득세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세율이 상승한다.
가격 변화의 대체효과는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선택 변화이고, 소득효과는 실질소득 변화에 따른 선택 변화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부분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같은 방향'이다. 소득세로 세후임금이 하락하면 대체효과는 여가를 늘리고 노동공급을 줄인다. 여가가 정상재이면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효과는 여가를 줄이고 노동공급을 늘리므로 두 효과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② O — 헤이그-사이먼즈는 포괄적 소득을 소비와 순자산 증가액의 합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소비에 사용된 경제적 능력도 소득세 과세대상인 소득의 구성요소가 된다.
③ X — 틀린 부분은 '비례소득세는 수직적 공평성을 제고시킨다'이다. 비례소득세는 모든 소득계층에 동일한 평균세율을 적용하므로 세전 소득의 상대적 격차를 줄이지 않는다. 수직적 공평성과 소득재분배를 적극적으로 제고하는 것은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세율이 상승하는 누진소득세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소득효과는 저축에 대한 매력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이자소득세로 세후이자율이 하락하여 현재소비에 비해 미래소비의 상대가격이 높아지고 저축의 매력이 낮아지는 것은 대체효과이다. 소득효과는 실질소득 감소 때문에 현재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두 효과의 합인 저축의 최종 변화는 불확정적이다.
⑤ X — 틀린 부분은 '수평적 공평성을 중시'와 '평균세율은 감소'이다. 누진소득세는 서로 다른 담세력을 다르게 취급하는 수직적 공평성을 중시하며, 과세소득이 증가하면 세금부담액과 평균세율이 모두 증가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과 ④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이름을 뒤바꾼 함정이다. ⑤는 누진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수평적 공평성으로 바꾸고, 상승하는 평균세율을 감소한다고 바꾼 복합 오답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세후임금이나 세후이자율의 하락이 상대가격을 바꾸는 부분은 대체효과로, 구매력 또는 실질소득을 바꾸는 부분은 소득효과로 판단한다. 세율 구조는 비례세이면 평균세율 일정, 누진세이면 평균세율 상승으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헤이그-사이먼즈는 소비＋순자산 증가, 비례세는 평균세율 일정, 누진세는 평균세율 상승이다. 노동공급과 저축에서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서로 반대 방향일 수 있다.

NoteBase

문 16. 최적과세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램지원칙에 의하면, 생활필수품은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부과되게 된다.

② 램지원칙에 의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관계없이 모든 재화에 대해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③ 램지원칙에 의하면, 사치품은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

④ 스턴(N. Stern)의 최적선형누진세에 따르면, 공평성을 선호할수록 최고한계세율이 낮아진다.

⑤ 램지원칙은 공평성의 제고를 위한 과세원칙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램지원칙의 역탄력성 규칙과 스턴의 최적선형누진세에서 효율성과 공평성이 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램지원칙: 일정한 조세수입을 확보하면서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다른 조건이 같다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재화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역탄력성 규칙이다. 핵심 목적은 효율성이다.
스턴의 최적선형누진세: 근로의욕 저하에 따른 효율성 손실과 소득재분배에 따른 공평성 증진을 함께 고려하여 최적 한계세율을 정한다. 공평성을 더 중시할수록 재분배의 편익이 커져 최적 한계세율은 높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생활필수품은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으므로, 램지원칙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관계없이 모든 재화에 동일한 세율'이다. 올바르게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재화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탄력적인 사치품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다. 올바르게는 수요가 탄력적인 재화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부과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공평성을 선호할수록 최고한계세율이 낮아진다'이다. 올바르게는 공평성을 더 중시할수록 소득재분배의 편익이 커지므로 최적 한계세율은 높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⑤ X — 틀린 표현은 '공평성의 제고를 위한 과세원칙'이다. 올바르게는 램지원칙은 일정한 조세수입 아래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려는 효율성 중심의 과세원칙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생활필수품에 높은 세율’이라는 결론을 공평성 원칙으로 오해하기 쉽다. 램지원칙은 담세능력이나 분배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기준으로 초과부담을 줄이는 원칙이므로, 형평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역진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④는 공평성 선호와 최적 한계세율의 방향을 반대로 제시한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램지원칙은 ‘비탄력적이면 높은 세율, 탄력적이면 낮은 세율’로 판단한다. 스턴 모형에서는 공평성 선호가 강해질수록 재분배 편익이 커지므로 최적 한계세율이 높아지는 방향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램지: 역탄력성과 효율성. 스턴: 공평성 선호가 강할수록 최적 한계세율은 상승한다.

NoteBase

문 17. 다음은 근로장려세제와 관련한 어떤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이다. 실증분석 결과에 대해 유추 가능한 다음의 해석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한부모 여성가구주(single mother)의 노동공급은 증가하였다.
(나) 부부의 경우, 주소득자의 노동공급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부소득자의 노동공급은 크게 감소하였다.
(다) 근로장려세제 대상자들 전체의 노동공급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ㄱ. (가)의 해석: 한부모 여성가구주들은 제도 도입 전에 주로 무노동계층이었거나, 점증구간에 속해 있었을 것이다.
ㄴ. (나)의 해석: 가구 주소득자의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은 매우 작은 반면, 부소득자의 임금탄력성은 클 것이다.
ㄷ. (다)의 해석: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정책도입 후 실제로 노동공급 증가량과 노동공급 감소량은 대체로 비슷하게 발생하였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근로장려세제가 가구 유형과 소득 구간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 및 노동시간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며, 집단별 증가와 감소가 전체 수준에서는 상쇄될 수 있음을 해석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에 따라 급여가 증가하는 점증구간, 일정하게 유지되는 평탄구간, 감소하는 점감구간을 가진다. 무노동자의 취업을 유도하는 노동시장 참여 효과는 대체로 노동공급을 늘리지만, 이미 일하는 사람의 노동시간 효과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부부 가구에서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제도가 적용되므로 주소득자와 부소득자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옳지만 ㄴ과 ㄷ도 옳으므로 ㄱ만 고른 것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을 모두 골라야 한다.

② X
ㄱ과 ㄴ은 옳지만 ㄷ도 옳으므로 ㄷ을 제외한 것이 틀렸다. 대상자 전체의 노동공급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결과는 집단별 노동공급 증가와 감소가 대체로 상쇄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을 모두 골라야 한다.

③ X
ㄱ과 ㄷ은 옳지만 ㄴ도 옳으므로 ㄴ을 제외한 것이 틀렸다. 주소득자의 노동공급은 거의 변하지 않고 부소득자의 노동공급은 크게 감소했다는 차이는 주소득자의 임금탄력성이 작고 부소득자의 임금탄력성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을 모두 골라야 한다.

④ X
ㄴ과 ㄷ은 옳지만 ㄱ도 옳으므로 ㄱ을 제외한 것이 틀렸다. 한부모 여성가구주의 노동공급 증가는 제도 도입 전에 무노동 상태여서 취업 유인이 생겼거나, 점증구간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보조로 노동공급 유인이 커졌을 가능성과 부합한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을 모두 골라야 한다.

⑤ O
ㄱ은 한부모 여성가구주의 노동공급 증가를 참여 효과 또는 점증구간의 유인으로 설명하고, ㄴ은 주소득자와 부소득자의 반응 차이를 임금탄력성 차이로 설명하며, ㄷ은 전체 순변화가 거의 없다는 결과를 증가량과 감소량의 상쇄로 설명한다. 세 해석이 모두 실증분석 결과와 부합한다.

오답 포인트

(다)의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를 모든 개인의 노동공급이 변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한부모 가구의 증가와 부부 가구 부소득자의 감소처럼 서로 반대되는 변화가 집계 과정에서 상쇄되어 전체 변화가 작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가)의 증가는 노동시간 조정뿐 아니라 무노동자의 취업이라는 참여 효과도 포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는 먼저 노동시장 참여 여부, 다음으로 점증·평탄·점감구간, 마지막으로 가구 내 주소득자와 부소득자의 반응 차이를 구분해 판단한다. 전체 효과가 0에 가깝다는 결과는 집단별 효과가 모두 0이라는 뜻이 아니라 증가와 감소의 상쇄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한부모는 참여 증가, 부부의 부소득자는 공급 감소, 전체는 상쇄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18. 탈세와 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다.

② 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 A. Sandmo)에 따르면, 탈세의 편익은 세율로 표현될 수 있으며, 세율이 낮을수록 탈세는 늘어나게 된다.

③ 절대위험기피도가 체감하는 개인은 세율이 오르면 탈루소득의 크기를 줄인다.

④ 탈세로 인한 심리적 비용이 클수록 탈세 규모는 감소한다.

⑤ 알링햄-샌드모에 따르면, 세율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감사확률과 벌금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탈세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절세와 탈세를 구분하고, 알링햄-샌드모의 탈세 모형에서 세율·감사확률·벌금·위험기피가 탈세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절세는 세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세 부담을 줄이는 합법적 행위이고, 탈세는 소득 누락이나 허위 신고 등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위법 행위이다. 알링햄-샌드모 모형에서 납세자는 탈세로 절약되는 세금과 적발될 확률 및 적발 시 벌금이 만드는 기대비용을 비교한다. 세율은 탈세로 절약되는 세액의 크기와 연결되므로 세율이 낮아지면 탈세의 편익도 작아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는 공제·감면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행위이다.
② X — 틀린 부분은 '세율이 낮을수록 탈세는 늘어나게 된다'이다. 탈세로 얻는 세금 절약의 편익은 세율과 같은 방향으로 변하므로,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세율이 낮아지면 그 편익은 작아진다. 올바르게는 '세율이 높을수록 탈세의 한계편익이 커진다'이다. 다만 세율 상승이 전체 탈세 규모에 미치는 최종 효과는 모형의 벌금 부과 방식과 소득효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③ O — 세율 상승은 가처분소득을 줄이는 소득효과를 낳는다. 절대위험기피도가 체감하는 사람은 소득이 줄면 절대위험기피도가 커져 위험한 탈세를 덜 선택하므로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한다.
④ O — 심리적 비용은 탈세가 주는 효용을 낮추는 추가 비용이다. 죄책감이나 사회적 비난에 따른 비용이 커질수록 탈세의 순편익이 감소하므로 탈세 규모도 감소한다.
⑤ O — 감사확률과 벌금이 높아지면 탈세의 기대비용이 커진다. 따라서 세율을 자주 변경하기보다 감사확률과 벌금을 조절하여 탈세를 억제한다는 정책적 설명은 모형의 결론에 부합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낮은 세율'과 '큰 탈세 편익'을 잘못 연결한다. 세율이 낮으면 숨긴 소득 1원당 절약되는 세금도 작아진다. 또한 세율 상승의 한계편익 효과와 소득효과를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탈세 규모의 변화를 묻는 경우 세금 절약이라는 편익, 감사확률과 벌금이 만드는 기대비용, 위험기피에 따른 소득효과를 나누어 판단한다. 감사확률·벌금·심리적 비용의 상승은 탈세를 줄이고, 세율 하락은 탈세로 절약되는 세액을 줄인다.

암기 포인트

절세는 합법, 탈세는 위법이다. 탈세 유인은 세금 절약과 적발확률·벌금·심리적 비용의 비교로 결정된다.

NoteBase

문 19. 한 개인은 소득 M으로 사치재 X와 필수재 Y만을 소비한다. 이 사람의 예산선 기울기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은?

① 사치재인 X에 고율의 소비세가 부과되었다.

② 소득에 정액세가 부과되었다.

③ 현금보조금을 받았다.

④ 소득보전 정책에 따라 납부소득세만큼 환급받았다.

⑤ X와 Y에 단일세율의 종가세가 부과되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예산선의 기울기는 두 재화의 상대가격으로 결정되고, 소득 변화는 기울기가 아니라 절편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예산제약식이 $P_X X + P_Y Y = M$이면 예산선의 기울기는 $-P_X/P_Y$이다. 따라서 한 재화의 가격만 변하면 기울기가 변하지만, 소득만 변하거나 두 재화의 가격이 같은 비율로 변하면 기울기는 변하지 않는다. 사치재와 필수재라는 구분은 소득탄력성에 관한 것이며 예산선의 기울기를 결정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X에만 고율의 소비세가 부과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P_X가 상승하고 P_Y는 그대로이므로 $-P_X/P_Y$가 변한다. 따라서 예산선의 기울기에 영향을 미친다.
② X — 틀린 부분은 정액세가 예산선의 기울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다. 정액세는 가처분소득을 줄일 뿐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으므로, 올바르게는 예산선이 안쪽으로 평행 이동하고 기울기는 그대로이다.
③ X — 틀린 부분은 현금보조금이 예산선의 기울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다. 현금보조금은 소득을 늘릴 뿐 두 재화의 가격비율을 바꾸지 않으므로, 올바르게는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평행 이동하고 기울기는 그대로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납부소득세만큼의 환급이 예산선의 기울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다. 이 환급은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내므로, 올바르게는 예산선의 위치 또는 절편만 바뀌고 상대가격에 따른 기울기는 그대로이다.
⑤ X — 틀린 부분은 X와 Y에 같은 세율의 종가세를 부과하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한다는 판단이다. 세율을 t라 하면 기울기는 $-P_X(1+t)/[P_Y(1+t)] = -P_X/P_Y$이므로, 올바르게는 두 가격이 같은 비율로 상승하여 절편은 줄어도 기울기는 변하지 않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정액세·현금보조금·소득세 환급처럼 구매력을 바꾸는 정책과 상대가격을 바꾸는 정책을 혼동하기 쉽다. 또한 ⑤는 두 가격이 모두 변하지만 같은 비율로 변하므로 가격비율이 유지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예산선의 기울기를 $-P_X/P_Y$로 놓고 정책이 P_X와 P_Y의 비율을 바꾸는지 확인한다. 소득만 변하면 평행이동이고, 한 재화의 가격만 변하면 회전하며, 두 가격이 같은 비율로 변하면 기울기는 유지된다.

암기 포인트

기울기는 상대가격, 소득은 절편이다. 한쪽 가격만 변하면 회전하고 두 가격이 같은 비율로 변하면 기울기는 그대로이다.

NoteBase

문 20. 우리나라 조세 중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인 것은?

① 레저세

② 교육세

③ 지역자원시설세

④ 농어촌특별세

⑤ 재산세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조세를 과세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세수의 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두 분류를 동시에 충족하는 세목을 찾는 것이다.

용어 풀이

목적세는 걷은 세금을 특정한 목적의 재원에 충당하도록 용도가 정해진 조세이다. 보통세는 세수의 용도가 특정 목적에 한정되지 않는 조세이다.

핵심 구분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인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이다.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인 목적세이고, 레저세와 재산세는 지방세이지만 보통세이다. 따라서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인 선택지는 지역자원시설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레저세는 지방세이지만 보통세이므로 목적세가 아니다.
틀린 분류: 지방세이면서 목적세
올바른 분류: 지방세이면서 보통세

② X
교육세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세이지만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이다. 지방세 목적세인 것은 명칭이 비슷한 지방교육세이다.
틀린 분류: 지방세이면서 목적세
올바른 분류: 국세이면서 목적세

③ O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이면서 특정 자원·시설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이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④ X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이지만 국세이다.
틀린 분류: 지방세이면서 목적세
올바른 분류: 국세이면서 목적세

⑤ X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이지만 세수의 용도가 특정 목적에 묶이지 않는 보통세이다.
틀린 분류: 지방세이면서 목적세
올바른 분류: 지방세이면서 보통세

오답 포인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와 혼동하면 ②를 고르기 쉽다. 교육세는 국세 목적세이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목적세이다. 또한 레저세와 재산세는 지방세라는 점만으로 목적세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국세·지방세를 구분하고, 그다음 보통세·목적세를 구분한다. 지방세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라는 분류를 적용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지방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국세 목적세이다.

NoteBase

문 21. 기술적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은 발생하지 않는다.
ㄴ. 화학공장이 강 상류에 폐수를 방출하였다.
ㄷ. 대규모 건설공사로 인한 건축자재 가격 상승으로 다른 건축업자가 피해를 입었다.
ㄹ. 양봉업이 인근 과수원의 생산에 영향을 미쳤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기술적 외부성이 시장가격을 거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의 효용이나 생산에 직접 영향을 주는 현상임을 이해하고, 가격 변화를 통해 영향을 주는 금전적 외부성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술적 외부성: 어떤 경제주체의 행동이 보상이나 대가 없이 다른 경제주체의 효용 또는 생산함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시장가격에 그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므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금전적 외부성: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재화나 생산요소의 가격을 변화시켜 다른 경제주체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가격기구를 통한 영향이라는 점에서 기술적 외부성과 구별된다.
ㄱ은 거짓, ㄴ은 참, ㄷ은 거짓, ㄹ은 참이므로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ㄴ은 옳지만 ㄱ은 옳지 않다. ㄱ의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은 발생하지 않는다'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기술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사적 비용·편익과 사회적 비용·편익이 달라져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② X — ㄱ과 ㄷ이 모두 옳지 않다. ㄱ은 기술적 외부성이 비효율을 일으킬 수 있다고 고쳐야 하며, ㄷ의 건축자재 가격 상승은 가격을 통해 다른 건축업자에게 영향을 주는 금전적 외부성이므로 기술적 외부성의 사례가 아니라고 해야 한다.
③ X — ㄴ은 옳지만 ㄷ은 옳지 않다. 화학공장의 폐수는 하류 이용자나 생태계에 직접 피해를 주는 부정적 기술적 외부성이지만, 건축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는 금전적 외부성이다. 따라서 ㄷ 대신 ㄹ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O — ㄴ의 폐수 방출은 타인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부정적 기술적 외부성이고, ㄹ의 양봉은 벌의 수분 활동을 통해 인근 과수원의 생산을 직접 늘릴 수 있는 긍정적 기술적 외부성이다. 따라서 ㄴ과 ㄹ의 조합이 옳다.
⑤ X — ㄹ은 옳지만 ㄷ은 옳지 않다. ㄷ의 '건축자재 가격 상승'은 시장가격을 매개로 한 금전적 외부성이며, 올바르게는 기술적 외부성의 사례에서 제외하고 직접적인 생산 영향인 ㄴ을 포함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ㄷ에는 다른 건축업자의 '피해'가 제시되어 있어 외부불경제처럼 보이지만, 피해가 건축자재 가격 상승을 통해 발생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영향의 유불리가 아니라 가격을 거치는지, 효용·생산에 직접 작용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전달 경로를 확인한다. 오염·소음·수분처럼 효용이나 생산에 직접 작용하면 기술적 외부성이고,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처럼 시장가격을 통해 작용하면 금전적 외부성이다.

암기 포인트

직접 영향은 기술적 외부성, 가격을 통한 영향은 금전적 외부성이다. 폐수는 부정적 기술적 외부성, 양봉과 과수원은 긍정적 기술적 외부성의 대표 사례이다.

NoteBase

문 22. 다음은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 국가의 최근 10년간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추이이다. 이에 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조세 부담률	18.4	18.7	18.2	18.0	18.5	18.4	18.6	18.4	18.5	18.6
국민 부담률	24.2	24.8	24.7	25.7	26.4	27.5	28.3	29.0	29.4	30.1

ㄱ. 사회보장성 기여금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ㄴ. 최근 10년간 GDP 증가율이 매년 1%로 표준화되었다고 할 때, 2014년 대비 2015년도의 조세의 세수탄력성(세수변화율/GDP변화율)은 1보다 크다.
ㄷ. 조세부담률이 전년도와 동일하다면, 조세수입은 경제성장률만큼 증가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의 차이로 사회보장성 기여금 부담률을 구하고, 조세부담률의 변화와 GDP 증가율을 함께 반영하여 세수탄력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성 기여금 부담률을 더한 값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성 기여금 부담률은 국민부담률에서 조세부담률을 뺀 값이다.
조세수입을 T, GDP를 Y, 조세부담률을 $t = T/Y$라고 하면 $T = tY$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ㄱ: 국민부담률에서 조세부담률을 뺀 값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차례로 5.8, 6.1, 6.5, 7.7, 7.9, 9.1, 9.7, 10.6, 10.9, 11.5%p이다. 해마다 증가하므로 ㄱ은 옳다.
ㄴ: 2014년 조세부담률은 18.5%, 2015년은 18.4%이고 GDP는 1% 증가한다. 따라서 세수탄력성은 $((18.4/18.5) \times 1.01 - 1)/0.01 \approx 0.454$로 1보다 작으므로 ㄴ은 틀리다.
ㄷ: 조세부담률 t가 전년도와 같으면 $T = tY$에서 조세수입의 증가율은 GDP의 증가율과 같아지므로 ㄷ은 옳다.

선지 판단

① X — ㄱ은 옳지만 옳은 ㄷ이 빠져 있다. 틀린 구성 'ㄱ' → 올바르게는 'ㄱ, ㄷ'이다.
② X — ㄴ은 세수탄력성이 약 0.454이므로 틀리고, 옳은 ㄷ도 빠져 있다. 틀린 구성 'ㄱ, ㄴ' → 올바르게는 'ㄱ, ㄷ'이다.
③ O — ㄱ과 ㄷ이 모두 옳고 ㄴ은 틀리므로 옳은 조합이다.
④ X — ㄴ은 틀리고 ㄱ은 옳다. 틀린 구성 'ㄴ, ㄷ' → 올바르게는 'ㄱ, ㄷ'이다.
⑤ X — ㄴ이 틀리므로 세 진술을 모두 고를 수 없다. 틀린 구성 'ㄱ, ㄴ, ㄷ' → 올바르게는 'ㄱ, ㄷ'이다.

오답 포인트

ㄱ에서는 국민부담률 자체의 증가가 아니라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의 연도별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ㄴ에서는 조세부담률이 18.5%에서 18.4%로 낮아졌다는 사실만 보거나 두 부담률의 단순 차이만 계산하면 안 된다. GDP가 1% 증가한 효과까지 반영한 조세수입 증가율을 GDP 증가율로 나누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국민부담률에서 조세부담률을 빼 사회보장성 기여금 부담률을 구한다. 세수탄력성은 조세부담률의 증감만 보지 않고 $T = tY$로 각 연도의 조세수입 변화를 계산한 뒤, 그 증가율을 GDP 증가율로 나누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성 기여금 부담률, 세수탄력성 = 조세수입 증가율 ÷ GDP 증가율이다. 조세부담률이 일정하면 세수 증가율과 GDP 증가율은 같다.

NoteBase

문 23. 자연독점 하의 공기업에서 공공요금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여 평균비용을 낮추기 위해 하나가 아닌 여러 공기업에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민간기업이 생산하고 가격규제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최적생산량 달성이 가능하다.

③ 이부가격제도(two-part tariff)를 도입하면, 생산량 자체는 효율적이다.

④ 한계비용가격 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의 경제적 이윤이 0이 된다.

⑤ 평균비용가격 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자연독점에서 한계비용가격, 평균비용가격, 이부가격제가 생산량의 효율성과 공기업의 수지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연독점은 관련 생산량 범위에서 한 기업이 시장 전체를 공급하는 편이 여러 기업이 나누어 공급하는 것보다 총비용이 낮은 상태이다.
한계비용가격은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게 하여 효율적 생산량을 달성하지만,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높으면 적자가 발생한다.
평균비용가격은 가격을 평균비용과 같게 하여 경제적 이윤을 0으로 만들지만,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아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작다.
이부가격제는 이용량에 따른 가격과 고정 가입료를 함께 부과한다. 단위당 가격을 한계비용으로 정하면 생산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고정요금으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여러 공기업에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다. 자연독점은 규모의 경제 때문에 하나의 기업이 통합 생산하는 편이 여러 기업의 분할 생산보다 비용이 낮다. 올바르게는 하나의 공기업이 생산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② X. 틀린 표현은 '가격규제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최적생산량 달성이 가능하다'이다. 규제받지 않는 민간 독점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높게 설정하여 생산량을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줄인다. 올바르게는 가격규제가 없으면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적게 생산한다.
③ O. 표준적인 이부가격제에서는 단위당 사용가격을 한계비용과 같게 정하므로 소비자의 사용량과 기업의 생산량이 효율적 수준에서 결정된다. 고정요금은 고정비용 회수에 사용된다.
④ X. 틀린 표현은 '경제적 이윤이 0이 된다'이다. 자연독점의 관련 생산량에서는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높으므로 한계비용가격을 적용하면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 적자가 발생한다. 올바르게는 평균비용가격을 설정할 때 경제적 이윤이 0이 된다.
⑤ X. 틀린 표현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다'이다. 평균비용가격에서는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아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작다. 올바르게는 한계비용가격을 설정할 때 사회적 최적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④와 ⑤는 한계비용가격과 평균비용가격의 효과를 서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한계비용가격은 효율성을 얻는 대신 적자가 발생하고, 평균비용가격은 수지균형을 얻는 대신 생산량이 비효율적으로 작아진다. 또한 ③의 고정요금은 단위당 사용가격을 높이는 것이 아니므로, 단위당 가격을 한계비용에 맞춘 생산량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연독점의 가격규제 문제에서는 먼저 '생산량의 효율성'과 '공기업의 수지균형'을 구분한다. 단위당 가격이 한계비용과 같으면 생산량은 효율적이고, 가격이 평균비용과 같으면 경제적 이윤은 0이다. 이부가격제는 한계비용에 맞춘 사용가격과 비용 회수를 위한 고정요금을 결합한다.

암기 포인트

한계비용가격은 효율·적자, 평균비용가격은 수지균형·과소생산, 이부가격제는 사용가격으로 효율·고정요금으로 비용 회수이다.

NoteBase

문 24. 긍정적 외부성이 있는 재화의 수요함수가 $Q = 10 - p$이고, 한계편익함수는 $Q = 5 - p$이다. 한계생산비용이 7.5라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단, Q는 수량, p는 가격이다.)

① 1.25

② 3.75

③ 7.5

④ 10.0

⑤ 15.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긍정적 외부성이 있을 때 한계사적편익과 한계외부편익을 합하여 한계사회편익을 구하고, 이를 한계생산비용과 일치시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수요함수 $Q = 10 - p$를 역수요함수로 바꾸면 한계사적편익은 $MPB = 10 - Q$이다.
주어진 한계편익함수 $Q = 5 - p$는 긍정적 외부성에서 발생하는 한계외부편익이므로 $MEB = 5 - Q$이다.
한계생산비용은 $MC = 7.5$이며, 구해야 할 값은 $MSB = MC$를 만족하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다.

사용할 공식

긍정적 외부성이 있는 재화의 한계사회편익은 다음과 같다.
$MSB = MPB + MEB$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는 한계사회편익과 한계생산비용이 일치한다.
$MSB = MC$
소비자가 얻는 사적 편익뿐 아니라 제3자에게 생기는 외부편익도 사회 전체의 편익에 포함해야 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두 함수를 가격에 관해 정리한다.
$MPB = 10 - Q, \qquad MEB = 5 - Q$
2. 한계사회편익을 구한다.
$MSB = (10 - Q) + (5 - Q) = 15 - 2Q$
3. 한계사회편익과 한계생산비용을 일치시킨다.
$15 - 2Q = 7.5$
$2Q = 7.5$
$Q = 3.75$
따라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3.75이다.

선지 판단

① X — 1.25는 $MSB = MC$에서 구한 값이 아니다. '1.25'가 틀렸으며, 올바른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3.75이다.
② O — $15 - 2Q = 7.5$를 풀면 $Q = 3.75$이므로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③ X — 7.5는 문제에서 주어진 한계생산비용이지 생산량이 아니다. '7.5'가 틀렸으며, 올바른 생산량은 3.75이다.
④ X — 10.0은 수요함수의 가격절편이며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 아니다. '10.0'이 틀렸으며, 올바른 생산량은 3.75이다.
⑤ X — 15.0은 한계사회편익함수 $MSB = 15 - 2Q$의 절편이며 생산량이 아니다. '15.0'이 틀렸으며, 올바른 생산량은 3.75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긍정적 외부편익을 빼거나, 역수요함수의 절편과 생산량을 혼동하는 것이다. 긍정적 외부성이 있으므로 MPB에 MEB를 더해야 하며, $7.5 \cdot 10 \cdot 15$와 같은 비용 또는 편익의 절편을 곧바로 생산량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모든 함수를 P 또는 한계편익 형태로 역산한 뒤, 긍정적 외부성이면 $MSB = MPB + MEB$를 만들고 마지막에 $MSB = MC$를 풀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구한다.

암기 포인트

긍정적 외부성에서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MSB = MPB + MEB$, 사회적 최적점은 $MSB = MC$이다.

NoteBase

문 25. 지방분권제도가 중앙집권제도보다 더 바람직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금 징수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②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③ 공공재에 대한 선호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다.

④ 주민들의 지역 간 이동비용이 낮다.

⑤ 공공재와 세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비용이 높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방분권이 중앙집권보다 유리해지는 조건을 묻는다. 지역별 선호를 반영할 편익이 크고 주민의 지역 간 선택이 쉬운 반면, 중앙정부가 누릴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작을수록 지방분권이 유리하다.

핵심 개념

지방분권은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서로 다른 선호에 맞추어 공공재와 조세의 조합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중앙집권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급과 징수에서 규모의 경제를 얻기 쉽다. 티부 모형에서는 주민이 공공재·조세 조합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을수록 지방정부 간 경쟁과 선호 충족이 잘 이루어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 세금 징수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중앙에서 통합 징수할 때 평균비용을 낮출 수 있으므로 중앙집권에 유리하다. 틀린 표현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이며, 지방분권이 더 바람직한 조건으로 고치면 '세금 징수에서 규모의 경제가 크지 않다'이다.

② X — 공공재 공급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넓은 범위에서 공동 공급하는 중앙집권의 비용상 이점이 커진다. 틀린 표현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이며, 지방분권이 더 바람직한 조건으로 고치면 '공공재 공급에서 규모의 경제가 크지 않다'이다.

③ X — 모든 지역의 공공재 선호가 동일하면 지역별로 공급 수준을 달리할 편익이 작아져 중앙의 획일적 공급에 따른 손실도 작다. 틀린 표현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다'이며, 지방분권이 더 바람직한 조건으로 고치면 '지역마다 서로 다르다'이다.

④ O — 주민의 지역 간 이동비용이 낮으면 원하는 공공재·조세 조합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기 쉬워진다. 이는 티부식 주민 이동과 지방정부 간 경쟁이 작동하기 좋은 조건이므로 지방분권의 편익을 높인다.

⑤ X — 공공재와 세금에 관한 정보 획득비용이 높으면 주민이 지역별 공공재·조세 조합을 비교하기 어려워 티부식 선택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비용이 높다'이며, 지방분권이 더 바람직한 조건으로 고치면 '정보를 획득하는 비용이 낮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②의 '규모의 경제'를 지방정부의 장점으로 착각하기 쉽다. 규모의 경제는 공급이나 징수를 한곳에 모을수록 비용이 절감된다는 뜻이므로 중앙집권 쪽 조건이다. 또한 지방분권은 지역별 선호 차이, 낮은 이동비용, 낮은 정보비용이 있을 때 강해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지역별 맞춤 공급과 주민 선택이 잘 작동하는지를 본다. 지역 간 선호 차이가 크고 이동비용과 정보비용이 낮으면 지방분권에 유리하다. 반대로 조세 징수나 공공재 공급의 규모의 경제가 크고 지역별 선호가 비슷하면 중앙집권에 유리하다.

암기 포인트

지방분권은 선호 차이는 크고, 이동·정보비용과 규모의 경제는 작을수록 유리하다.

NoteBase

문 26. 보상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효용가능곡선이 교차하지 않는 경우, 보상기준이 충족되면 잠재적으로 사회후생이 증가된다.

② 스키토브스키(T. Scitovsky)기준은 칼도-힉스(Kaldo-Hicks)기준의 모순을 보완하기 위한 기준이다.

③ 파레토기준은 칼도-힉스의 보상기준을 충족한다.

④ 칼도기준은 상태 변경으로 이득을 얻는 사람의 이득으로 손해 보는 사람의 손실을 보상하고도 남는 경우를 말한다.

⑤ 힉스(J. R. Hicks) 기준은 상태 변경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사람을 매수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파레토기준과 칼도·힉스의 잠재적 보상기준, 그리고 스키토브스키의 이중기준이 사회상태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파레토기준: 누구의 효용도 감소하지 않으면서 적어도 한 사람의 효용이 증가해야 사회후생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하는 실제적 기준이다.
칼도기준: 변화의 이득자가 손실자를 보상하고도 이득을 남길 수 있으면 그 변화를 개선으로 판단하는 잠재적 보상기준이다.
힉스기준: 변화의 손실자가 이득자를 매수하여 그 변화를 포기하게 만들 수 없다면 그 변화를 개선으로 판단하는 기준이다.
스키토브스키기준: 정방향 변화는 보상기준을 충족하고 역방향 변화는 보상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야 개선으로 인정하는 이중기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두 사회상태의 효용가능곡선이 교차하지 않으면 정방향과 역방향이 모두 우월하다고 판정되는 역전 가능성이 배제되므로, 보상기준을 충족한 변화는 잠재적 사회후생 증가로 평가할 수 있다.
② O. 단순한 칼도·힉스 기준은 정방향과 역방향이 모두 개선으로 판정될 수 있는 모순을 낳는다. 스키토브스키기준은 정방향 검정과 역방향 검정을 함께 적용하여 이를 보완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파레토기준은 칼도-힉스의 보상기준을 충족한다'이다. 두 기준의 관계는 칼도·힉스 기준이 실제 보상 없이도 보상 가능성만으로 잠재적 파레토 개선을 판정한다는 데 있다. 올바르게는 '칼도·힉스 기준에서 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져 누구도 손해 보지 않게 되면 파레토 개선이 된다'라고 표현한다.
④ O. 칼도기준은 상태 변화의 이득자가 손실자에게 손실액을 보상한 뒤에도 순이득을 남길 수 있는지를 본다.
⑤ O. 힉스기준은 손실자가 이득자에게 변화 포기의 대가를 지급하여 기존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본다. 손실자가 그러한 매수에 실패하면 상태 변화가 개선으로 인정된다.

오답 포인트

③은 파레토기준과 잠재적 보상기준의 관계를 뒤섞은 표현이다. 칼도·힉스 기준에서는 보상이 실제로 지급될 필요가 없지만, 파레토 개선이 되려면 실제 결과에서 누구도 이전보다 나빠지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득자가 보상하고도 남는다'는 칼도기준, '손실자가 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매수에 실패한다'는 힉스기준, '정방향은 통과하고 역방향은 실패한다'는 스키토브스키기준으로 구분한다. 실제 보상 여부가 언급되면 잠재적 파레토 개선과 실제 파레토 개선을 나누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칼도는 이득자의 보상능력, 힉스는 손실자의 매수실패, 스키토브스키는 역방향까지 확인하는 이중검정이다.

NoteBase

문 27. 어떤 시장에 공급함수와 수요함수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하자.
$P = aQ_S + 10, \quad P = 100 - bQ_D$ 초기 균형 상태에서 정부가 공급자에게 단위당 10만큼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세수와자중손실(deadweight loss)의 비(세수 : 자중손실)는 얼마인가? (단, P는 가격이고 Q_S는 공급량, Q_D는 수요량이고 $a > 0$, $b > 0$이다.)

① 20:1

② 16:1

③ 12:1

④ 8:1

⑤ 3.7:1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단위세 부과 뒤의 거래량으로 세수를 구하고, 세금 때문에 줄어든 거래량으로 자중손실을 구해 두 값의 비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초기 균형에서는 수요가격과 공급가격이 같으므로 $100 - bQ = aQ + 10$이다. 공급자에게 단위당 10의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가격과 공급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10의 조세 쐐기가 생기므로 $100 - bQ = aQ + 20$이 된다.

사용할 공식

세수는 $T = tQ_1$, 자중손실은 $DWL = \frac{1}{2}t(Q_0 - Q_1)$이다. 단위세가 거래량을 줄이면 사라진 거래의 총잉여가 밑변 $Q_0 - Q_1$, 높이 t인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이 자중손실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초기 균형거래량은 $100 - bQ_0 = aQ_0 + 10$에서 $Q_0 = \frac{90}{a+b}$이다.
2. 세금 부과 후 거래량은 $100 - bQ_1 = aQ_1 + 20$에서 $Q_1 = \frac{80}{a+b}$이다. 따라서 거래량 감소분은 $Q_0 - Q_1 = \frac{10}{a+b}$이다.
3. 세수는 $T = 10 \times \frac{80}{a+b} = \frac{800}{a+b}$이다.
4. 자중손실은 $DWL = \frac{1}{2} \times 10 \times \frac{10}{a+b} = \frac{50}{a+b}$이다.
5. 따라서 $T : DWL = \frac{800}{a+b} : \frac{50}{a+b} = 16 : 1$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20:1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세수와 자중손실의 비는 16:1이므로 '20:1'은 '16:1'로 고쳐야 한다.
② O — 세수 $\frac{800}{a+b}$를 자중손실 $\frac{50}{a+b}$로 나누면 16이므로 16:1이 맞다.
③ X — 12:1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공통인 $a+b$를 소거한 정확한 비는 16:1이므로 '12:1'은 '16:1'로 고쳐야 한다.
④ X — 8:1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자중손실의 삼각형 면적에는 $\frac{1}{2}$가 포함되므로 정확한 비는 16:1이며, '8:1'은 '16:1'로 고쳐야 한다.
⑤ X — 3.7:1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세수와 자중손실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a+b$는 비에서 소거되므로 정확한 비는 16:1이며, '3.7:1'은 '16:1'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세수에는 세금 부과 후 거래량 Q_1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자중손실은 세금과 거래량 감소분을 곱한 직사각형이 아니라 그 절반인 삼각형의 면적이다. ④의 8:1은 자중손실 계산에서 $\frac{1}{2}$를 누락할 때 나오는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위세 문제에서는 먼저 세전 거래량 Q_0과 세후 거래량 Q_1을 구한 뒤, 세수 tQ_1과 자중손실 $\frac{1}{2}t(Q_0-Q_1)$을 각각 계산한다. 비를 구할 때는 두 값의 공통항을 마지막에 소거한다.

암기 포인트

세수는 '세금 × 세후 거래량', 자중손실은 '$\frac{1}{2}$ × 세금 × 거래량 감소분'이다.

NoteBase

문 28. 정부 간 재원 이전제도인 교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지방세가 줄어들어 그로 인해 민간지출이 증가하기보다 지방정부의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나는 현상을 끈끈이 효과로 볼 수 있다.

② 대응교부금의 경우, 공공재 선택에서 대체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③ 무조건부 교부금의 경우, 소득효과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을 억제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의 국고 보조금과 보통 교부세는 조건부 교부금이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후생수준 증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무조건부 교부금은 최소한 대응교부금보다 우월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교부금을 사용 용도의 제한 여부와 지방정부의 자체 부담 여부로 구분하고, 각 교부금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및 지방정부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무조건부 교부금은 사용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으로, 지방정부의 예산을 늘리지만 공공재의 상대가격은 바꾸지 않아 소득효과만 발생시킨다.
조건부 교부금은 특정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하도록 제한된 재원이다.
대응교부금은 지방정부가 일정액을 자체 부담할 때 중앙정부가 정해진 비율로 보태는 방식이다. 지방공공재의 실질적인 상대가격을 낮추므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함께 발생한다.
끈끈이 효과는 같은 금액이 주민의 소득으로 주어질 때보다 상위정부의 교부금으로 주어질 때 지방공공지출이 더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교부금이 주민의 민간지출 증가로 빠져나가기보다 지방정부 지출에 더 강하게 남아 지방공공지출을 늘리는 현상은 끈끈이 효과에 해당한다.
② O — 대응교부금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지방공공재의 상대가격을 낮춰 공공재 선택에 대체효과를 일으킨다. 이 상대가격 왜곡 때문에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③ O — 무조건부 교부금은 예산선을 평행하게 이동시킬 뿐 지방공공재와 민간재 사이의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효과만 발생하며 대응교부금의 대체효과에서 생기는 비효율을 억제할 수 있다.
④ X — 틀린 부분은 '국고 보조금과 보통 교부세는 조건부 교부금'이라는 표현이다. 국고보조금은 정해진 사업과 용도에 사용하는 조건부 교부금이지만,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용도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일반재원인 무조건부 교부금이다. 올바르게는 '국고보조금은 조건부 교부금이고 보통교부세는 무조건부 교부금이다'이다.
⑤ O — 같은 재원을 이전할 때 무조건부 교부금은 지방정부의 선택 가능 범위를 제한하지 않지만 대응교부금은 상대가격을 왜곡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후생 측면에서 무조건부 교부금은 대응교부금보다 적어도 열등하지 않다.

오답 포인트

④는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를 모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재원이라는 공통점만 보고 두 제도를 같은 조건부 교부금으로 묶게 만든다. 구분 기준은 지급 주체가 아니라 사용 용도의 제한 여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용도가 지정되면 조건부,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사용하면 무조건부로 구분한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의 자체 부담에 따라 보조율이 적용되면 대응교부금이므로 상대가격 변화와 대체효과까지 발생한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국고보조금은 조건부, 보통교부세는 무조건부이다. 무조건부는 소득효과만, 대응교부금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함께 발생한다.

NoteBase

문 29. 다음은 강 상류에 위치한 화학공장 A와 하류의 양식장 B로 구성된 경제에 관한 상황이다. A는 제품생산 공정에서 수질오염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B에게 피해비용이 발생한다. A의 한계편익(MB_A)과 A의 생산으로 인한 B의 한계피해비용(MD_B)은 다음과 같다. $MB_A = 90 - \frac{1}{2}Q, \quad MD_B = \frac{1}{4}Q$ Q에 대한 A의 한계비용과 B의 한계편익은 0이며, 협상이 개시되는 경우 협상비용도 0이라고 가정하자.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Q는 A의 생산량이다.)

① 강의 소유권이 A에게 있고 양자 간의 협상이 없다면, A의 생산량은 180, A의 총편익은 8,100, B의 총비용은 4,050이다.

② 강의 소유권이 B에게 있고, 양자 간의 협상이 없다면, A의 생산량은 0, A의 총편익은 0, B의 총비용은 0이다.

③ 이 경제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A의 생산량은 120, A의 총편익은 7,200, B의 총비용은 1,800이다.

④ 강의 소유권이 A에게 있고 양자 간의 협상이 성립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이 달성된다면, A가 B로부터 받는 보상의 범위는 최소 900 이상, 최대 2,250 이하가 될 것이다.

⑤ 강의 소유권이 B에게 있고 양자 간의 협상이 개시되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산출량이 달성된다면, B가 A로부터 받는 보상의 범위는 최소 1,800 이상 최대 4,050 이하가 될 것이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한계편익과 한계피해비용을 적분하여 총편익과 총피해비용을 구하고, 재산권의 귀속에 따른 협상 전 상태와 코즈 협상의 보상 범위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A의 한계편익은 $MB_A = 90 - \frac{1}{2}Q$, B의 한계피해비용은 $MD_B = \frac{1}{4}Q$이다. A의 한계생산비용과 B의 한계편익은 0이며 협상비용도 0이다. 따라서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는 A의 한계편익과 B의 한계피해비용이 같아진다.

사용할 공식

A의 총편익과 B의 총피해비용은 각각 한계함수를 생산량 0부터 Q까지 적분하여 구한다.

$TB_A(Q) = \int_0^Q \left(90 - \frac{1}{2}q\right)dq = 90Q - \frac{1}{4}Q^2$

$TD_B(Q) = \int_0^{\frac{1}{4}q} dq = \frac{1}{8}Q^2$

사회적 최적 조건은 $MB_A = MD_B$이다. 협상 보상액은 권리자의 상태 변화로 생기는 최소 수용액 이상이면서 상대방이 얻는 이익의 최대 지불의사액 이하이어야 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강의 소유권이 A에게 있고 협상이 없으면 A는 $MB_A = 0$인 지점까지 생산하므로 $Q = 180$이다. 이때 $TB_A(180) = 8,100$, $TD_B(180) = 4,050$이다.
2. 강의 소유권이 B에게 있고 협상이 없으면 B가 오염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Q = 0$이고, 총편익과 총피해비용은 모두 0이다.
3.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90 - \frac{1}{2}Q = \frac{1}{4}Q$에서 $Q = 120$이다. 이때 $TB_A(120) = 7,200$, $TD_B(120) = 1,800$이다.
4. A가 권리를 가지면 생산량을 180에서 120으로 줄일 때 A가 잃는 편익은 $8,100 - 7,200 = 900$, B가 줄이는 피해는 $4,050 - 1,800 = 2,250$이다. 따라서 B가 A에게 지급할 보상액은 900 이상 2,250 이하이다.
5. B가 권리를 가지면 생산량을 0에서 120으로 늘릴 때 B가 입는 피해는 1,800이고 A가 얻는 편익은 7,200이다. 따라서 A가 B에게 지급할 보상액은 1,800 이상 7,200 이하이다.

선지 판단

① O. A가 강의 소유권을 가지고 협상하지 않으면 사적 최적 조건 $MB_A = 0$에서 생산량은 180이다. 적분한 총편익은 8,100, 총피해비용은 4,050이다.
② O. B가 강의 소유권을 가지고 협상하지 않으면 A는 오염을 수반하는 생산을 할 권리가 없으므로 생산량은 0이고 양측의 총편익과 총피해비용도 0이다.
③ O. 사회적 최적 조건 $MB_A = MD_B$에서 생산량은 120이며, 이 생산량에서 A의 총편익은 7,200이고 B의 총피해비용은 1,800이다.
④ O. A가 권리를 가진 상태에서 생산량을 180에서 120으로 줄이면 A의 편익 손실은 900이고 B의 피해 감소액은 2,250이다. 따라서 B가 A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의 협상 가능 범위는 900 이상 2,250 이하이다.
⑤ X. B가 권리를 가진 상태에서 생산량을 0에서 120으로 늘리면 B의 최소 수용액은 피해액 1,800이고 A의 최대 지불의사액은 새로 얻는 총편익 7,200이다. 틀린 표현은 '최대 4,050 이하'이며, 올바르게는 '최대 7,200 이하'이다.

오답 포인트

⑤의 4,050은 A가 권리를 가지고 $Q = 180$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B의 총피해비용이다. B가 권리를 가진 경우의 협상은 $Q = 0$에서 $Q = 120$으로 생산을 허용하는 상황이므로, 상한은 B의 피해액이 아니라 A가 얻는 총편익 7,200으로 정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재산권별 협상 전 생산량을 정하고, $MB = MD$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구한다. 그다음 협상으로 손해를 보는 당사자의 손실을 보상액 하한으로, 이익을 얻는 당사자의 이득을 보상액 상한으로 놓는다.

암기 포인트

코즈 협상의 보상 범위는 '권리자의 최소 수용액 이상, 협상 이득자의 최대 지불의사액 이하'이다.

NoteBase

문 30. 빈곤에 관한 아래의 정의식에 근거하여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빈곤율 = 빈곤층의 인구/전체인구
◯ 빈곤갭 = 빈곤층 인구수 × (빈곤선 - 빈곤층 인구의 평균소득)
◯ 소득갭비율 = (빈곤선 - 빈곤층 인구의 평균소득)/빈곤선
ㄱ. 빈곤율은 빈곤 완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규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못한다.
ㄴ. 빈곤갭은 빈곤층 내부의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ㄷ. 소득갭비율은 정부의 정책으로 빈곤층 인구의 평균소득을 증가시키면 늘어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빈곤율, 빈곤갭, 소득갭비율의 공식이 각각 빈곤의 규모와 심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빈곤층의 비율이다. 빈곤갭은 모든 빈곤층의 소득 부족액을 합한 값이다. 소득갭비율은 빈곤선 대비 빈곤층 평균소득의 부족 비율이다.

사용할 공식

빈곤층 인구수를 q, 전체 인구를 n, 빈곤선을 z, 빈곤층 평균소득을 $\bar{y}_p$라 하면 다음과 같다.
빈곤율=(q)/(n)
빈곤갭=q(z-y_p)
소득갭비율=z-y_pz
각 진술이 어느 변수에 반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판단 과정

ㄱ. 빈곤율은 빈곤층의 비중만 나타내므로 빈곤선까지 부족한 소득액, 즉 빈곤 완화에 필요한 재원규모를 알려주지 못한다. 따라서 옳다.
ㄴ. 빈곤층의 구성과 총소득이 그대로인 채 빈곤층 내부에서 소득만 재분배되면 q와 $\bar{y}_p$가 변하지 않으므로 빈곤갭도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옳다.
ㄷ. 정부 정책으로 빈곤층 평균소득 $\bar{y}_p$가 증가하면 분자 $z-\bar{y}_p$가 작아지므로 소득갭비율은 감소한다. 따라서 틀리다.
그러므로 옳은 진술은 ㄱ, ㄴ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옳지만 옳은 ㄴ을 빠뜨린 조합이다. 올바르게는 'ㄱ, ㄴ'이다.
② O — 옳은 진술인 ㄱ과 ㄴ만 묶은 조합이다.
③ X — 옳은 ㄴ을 빠뜨리고 틀린 ㄷ을 포함했다. 올바르게는 'ㄱ, ㄴ'이다.
④ X —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옳은 ㄱ도 빠져 있다. 올바르게는 'ㄱ, ㄴ'이다.
⑤ X — ㄱ과 ㄴ은 옳지만 틀린 ㄷ까지 포함했다. 올바르게는 'ㄱ, ㄴ'이다.

오답 포인트

ㄷ의 '평균소득이 증가하면 소득갭비율이 늘어난다'는 방향을 반대로 제시한 것이 핵심 함정이다. 평균소득이 증가하면 빈곤선까지의 부족분이 줄어 소득갭비율도 감소한다. 또한 빈곤율은 사람 수의 비율일 뿐 부족액의 크기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지표의 분자와 분모를 먼저 쓴 뒤, 문제에서 변한 변수가 식의 값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판단한다. 조합형에서는 개별 진술의 O/X를 모두 확정한 다음 선지와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빈곤율은 빈곤층의 수, 빈곤갭은 총부족액, 소득갭비율은 평균적인 부족 비율을 나타낸다. 평균소득이 오르면 소득갭비율은 내려간다.

NoteBase

문 31. A, B, C 세 가지 선택대상에 대한 갑, 을, 병 3인의 선호순위가 다음의 표와 같이 주어져 있다. 다수결에 의해 결정할 경우 꽁도세(Condorcet) 승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순위	2순위	3순위
갑	A	B	C
을	B	C	A
병	C	A	B

ㄱ. A와 B를 먼저 비교할 경우, 최종적으로 B가 선택된다.
ㄴ. A와 C를 먼저 비교할 경우, 최종적으로 B가 선택된다.
ㄷ. B와 C를 먼저 비교할 경우, 최종적으로 B가 선택된다.
ㄹ. 이 상황에서는 사회적 선호가 이행성을 만족시킨다.
ㅁ. 이 상황에서는 사회적 선호가 이행성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① ㄱ, ㄹ
② ㄱ, ㅁ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ㄱ, ㄴ,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개인별 선호를 두 대안씩 다수결로 비교하여 사회적 선호의 순환 여부와 의제의 비교 순서에 따른 최종 선택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갑의 선호는 $A \succ B \succ C$, 을의 선호는 $B \succ C \succ A$, 병의 선호는 $C \succ A \succ B$이다. 각 쌍의 비교에서는 3명 중 2명이 더 선호하는 대안이 이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A와 B의 비교: 갑과 병이 A를 선호하므로 A가 2 대 1로 이긴다. 따라서 $A \succ B$이다.
2. B와 C의 비교: 갑과 을이 B를 선호하므로 B가 2 대 1로 이긴다. 따라서 $B \succ C$이다.
3. C와 A의 비교: 을과 병이 C를 선호하므로 C가 2 대 1로 이긴다. 따라서 $C \succ A$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선호는 $A \succ B \succ C \succ A$의 순환을 이루며, 모든 다른 대안을 쌍대 비교에서 이기는 꽁도세 승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A와 B를 먼저 비교하면 A가 남고 이어서 C가 A를 이겨 최종 선택은 C이다. A와 C를 먼저 비교하면 C가 남고 이어서 B가 C를 이겨 최종 선택은 B이다. B와 C를 먼저 비교하면 B가 남고 이어서 A가 B를 이겨 최종 선택은 A이다. 따라서 ㄴ과 ㅁ만 옳다.

선지 판단

① X — ㄱ은 틀리고 ㄹ도 틀리다. A와 B를 먼저 비교하면 최종적으로 C가 선택되며, 사회적 선호는 이행성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ㄱ, ㄹ'은 'ㄴ, ㅁ'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ㄱ은 틀리지만 ㅁ은 옳다. ㄱ의 '최종적으로 B가 선택된다'는 '최종적으로 C가 선택된다'로 고쳐야 하므로 'ㄱ, ㅁ'은 'ㄴ, ㅁ'이 되어야 한다.

③ X —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ㄹ의 '이행성을 만족시킨다'는 '이행성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로 고쳐야 하므로 'ㄴ, ㄹ'은 'ㄴ, ㅁ'이 되어야 한다.

④ O — A와 C를 먼저 비교하면 C가 이기고, 다음 비교에서 B가 C를 이기므로 최종적으로 B가 선택된다. 또한 $A \succ B, B \succ C, C \succ A$의 순환 때문에 사회적 선호는 이행성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ㄴ과 ㅁ이 모두 옳다.

⑤ X — ㄱ과 ㄷ과 ㄹ이 틀리다. 각 문장은 각각 'A와 B를 먼저 비교하면 C가 선택된다', 'B와 C를 먼저 비교하면 A가 선택된다', '사회적 선호는 이행성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로 고쳐야 한다. 따라서 'ㄱ, ㄴ, ㄷ, ㄹ'은 'ㄴ, ㅁ'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개인의 선호순위가 모두 이행적이라는 사실과 다수결로 만든 사회적 선호가 이행적이라는 사실을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쌍대 다수결이 순환하므로 먼저 비교하는 대안에 따라 최종 선택이 C, B, A로 달라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가능한 모든 대안 쌍의 승패를 구한 뒤 방향을 연결한다. 순환이 나타나면 꽁도세 승자가 없고 사회적 선호의 이행성이 깨지며, 순차 다수결의 최종 결과는 비교 순서별로 따로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다수결 순환은 '꽁도세 승자 없음, 이행성 위반, 의제 순서에 따른 결과 변화'로 연결된다.

NoteBase

문 32.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산과 관련된 현상으로 소비와 관련되어 나타날 수 없다.

② 외부불경제가 존재하면 사회적 최적에 비하여 과다생산된다.

③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해 조세 또는 보조금을 사용한다.

④ 배출권 거래제는 공해 물질에 대한 시장을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재산권을 통해 외부성을 내부화한 경우, 소득분배의 방향과 관계없이 효율성 달성이 가능하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외부성의 발생 영역과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대표 수단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외부성이란 한 경제주체의 생산 또는 소비가 시장가격을 거치지 않고 제3자의 효용이나 생산비용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외부불경제에서는 사적 의사결정에 외부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시장의 활동량이 사회적 최적보다 많아지고,
외부경제에서는 외부편익이 반영되지 않아 시장의 활동량이 사회적 최적보다 적어진다.
조세·보조금, 배출권 거래, 재산권 설정과 자발적 협상은 외부효과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내부화 수단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소비와 관련되어 나타날 수 없다'이다. 외부성은 생산뿐 아니라 소비에서도 발생한다.
올바르게는 '외부성은 생산 또는 소비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다'이다.
② O — 외부불경제에서는 한계외부비용이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시장의 생산량 또는 활동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아진다.
③ O — 외부불경제에는 피구세를 부과하고 외부경제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적 비용·편익에 외부효과가 반영되어 외부성을 내부화할 수 있다.
④ O — 배출권 거래제는 총배출량을 제한한 뒤 배출권을 거래하게 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할 권리에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공해 물질 배출에 관한 시장을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O — 거래비용이 없고 재산권이 명확하다는 코즈 정리의 조건에서는 초기 재산권이 누구에게 배분되었는지와 관계없이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도달할 수 있다. 초기 재산권 배분은 소득분배에는 영향을 주지만 효율적 배분의 달성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①은 외부성을 생산 과정의 문제로만 한정한 것이 함정이다. 자동차 운전자의 배기가스처럼 소비 활동도 제3자에게 외부비용을 줄 수 있다. 또한 ⑤에서 '효율성 달성'과 '소득분배 결과'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부성 선지는 먼저 생산 외부성과 소비 외부성을 모두 포함하는지 확인한다. 이어서 외부불경제는 시장 활동량 과다, 외부경제는 시장 활동량 과소로 판단하고, 내부화 수단이 외부비용·외부편익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는지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외부성은 생산·소비 모두에서 발생하며, 외부불경제는 과다, 외부경제는 과소이다.

NoteBase

문 3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을 충당한다.

② 공공부조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③ 부과방식의 사회보험은 수지균형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공부조의 수혜 대상 결정은 소득· 재산조사를 근거로 한다.

⑤ 사회보험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보험료로 충당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재원 조달 방식과 수급자 선정 방식으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 등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바탕으로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핵심 차이는 사회보험이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기여 방식인 반면, 공공부조는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소득·재산조사를 거치는 자산조사 방식이라는 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이므로 사회보험의 보험료로 재원을 충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사회보험으로'이며, 올바르게는 '정부의 일반재정,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을 충당한다'이다.
② O — 공공부조는 기여금을 낸 가입자에게 급여를 주는 보험이 아니라 조세를 바탕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
③ O — 부과방식은 일정 기간에 들어온 보험료 수입으로 같은 기간의 급여 지출을 충당하는 방식이므로 기간별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원칙으로 한다.
④ O — 공공부조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급여를 제공하므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결과를 수혜 대상 결정의 근거로 삼는다.
⑤ O — 사회보험은 가입자와 사용자 등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운용한다. 정부 지원이 병행될 수 있어도 원칙적 재원이 보험료라는 설명은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사회보장제도'라는 큰 범주와 그 하위 제도인 '사회보험'을 혼동하게 만든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보장제도에는 속하지만 사회보험이 아니라 공공부조이므로, 사회보험료가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원을 먼저 본다. 보험료와 기여 이력이 중심이면 사회보험이고, 조세·정부 예산과 소득·재산조사가 중심이면 공공부조이다. 부과방식은 당기 보험료로 당기 급여를 지급하므로 당기 수지균형과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사회보험은 보험료·기여, 공공부조는 조세·자산조사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이다.

NoteBase

문 34. 국민연금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와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료율의 인상은 저소득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② 보험료율의 인상은 개인들의 현재 가처분소득을 줄일 것이다.

③ 보험료 부과 상한이 월 급여 4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인상된다면 월 급여 200만원인 근로자의 납입보험료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연금수급연령의 상향 조정은 단기적으로 연금수급자 수를 줄인다.

⑤ 연금수급연령이 65세이고 평균수명이 80세라고 가정할 때, 연금수급연령을 1년 상향 조정하면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국민연금 재정적자를 줄이는 조치가 보험료 수입, 가입자의 가처분소득, 연금 수급자 수와 급여 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는 보험료 수입을 늘리거나 연금 급여 지출을 줄이면 개선된다. 보험료율 인상과 보험료 부과 상한 인상은 수입 측 조치이고, 연금수급연령 상향은 수급 개시를 늦춰 지출을 줄이는 조치이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은 가입자의 현재 가처분소득을 줄이므로 저소득근로자에게도 부담이 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저소득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틀렸다. 보험료율이 오르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증가하여 현재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므로 저소득근로자에게도 부담이 된다. 올바르게는 '보험료율의 인상은 저소득근로자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이다.
② O — 보험료율이 오르면 소득에서 납부하는 보험료가 증가하므로 개인이 현재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줄어든다.
③ O — 월 급여 200만원은 인상 전 부과 상한인 400만원보다도 낮다. 따라서 상한을 4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올려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달라지지 않아 납입보험료에 영향이 없다.
④ O — 연금수급연령을 높이면 종전 기준으로 새로 연금을 받기 시작할 사람이 일정 기간 수급하지 못하므로 단기적으로 연금수급자 수가 줄어든다.
⑤ O — 다른 조건이 같다면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6세로 늦출 때 예상 수급기간은 15년에서 14년으로 줄어든다. 연금 급여 지출이 감소하므로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함정은 보험료율 인상이 연금재정에는 도움이 된다는 사실과 가입자의 부담이 없다는 주장을 혼동하게 하는 데 있다. 재정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가입자의 현재 부담과 가처분소득 감소가 발생한다. 또한 ③에서는 상한의 변화가 상한보다 낮은 소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험료율·부과 상한의 변화는 먼저 보험료 수입과 가입자의 가처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나누어 판단한다. 수급연령의 변화는 수급자 수와 예상 수급기간을 통해 급여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다. 부과 상한 문제에서는 해당 소득이 변경 전 상한을 넘는지부터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보험료율 인상은 수입 증가·가처분소득 감소, 수급연령 상향은 수급자와 수급기간 감소이다.

NoteBase

문 35. 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개인들은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② 민간 의료보험의 경우, 건강관리를 등한시하는 사람의 가입이 증가한다.

③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본인부담 진료비가 줄어들어 병원에 자주 간다.

④ 실손 민간 의료보험의 경우, 고가의 치료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출이 늘어난다.

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실제 비용보다 환자의 지불액이 낮을 때, 발생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의료보험 가입 후 보장 때문에 가입자의 행동이 달라지는 도덕적 해이와, 가입 전 위험 정보의 차이 때문에 고위험자가 더 많이 가입하는 역선택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도덕적 해이: 보험계약 후 의료비의 전부를 자신이 부담하지 않게 되면서 건강관리 노력을 줄이거나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행동 변화이다. 키워드는 '가입 후 행동 변화'이다.
역선택: 보험자가 가입자의 위험 정도를 충분히 알지 못하여 건강 위험이나 예상 의료비가 큰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입하는 현상이다. 키워드는 '가입 전 위험 유형의 선택'이다.
도덕적 해이는 행동이 달라지는 문제이고, 역선택은 가입자 구성이 달라지는 문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보험 가입 후 질병 발생 비용의 일부가 보험으로 이전되면 예방·건강관리 노력의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 이는 가입 후 행동 변화이므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② X — 틀린 부분은 '건강관리를 등한시하는 사람의 가입이 증가한다'는 가입자 구성의 변화이다. 건강 위험이 크거나 예상 의료비가 높은 사람이 민간 의료보험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입하는 현상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역선택이다. 도덕적 해이로 고치면 '의료보험 가입 후 건강관리 노력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가 된다.
③ O — 보험 가입으로 본인부담액이 낮아지면 의료 서비스의 체감가격이 하락하여 병원 이용이 늘어날 수 있다. 이는 보험 가입 후 의료 이용량이 증가하는 도덕적 해이이다.
④ O — 실손보험이 치료비를 보전하면 가입자가 비용이 더 큰 치료를 선택할 유인이 생길 수 있고, 그 결과 보험금 지출이 증가한다. 이는 가입 후 치료 방식 선택이 달라지는 도덕적 해이이다.
⑤ O — 의료 서비스의 실제 한계비용보다 환자가 직접 내는 금액이 낮으면 환자가 비용 전부를 고려하지 않아 의료 이용이 과다해질 수 있다. 이러한 가격 격차가 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의 '건강관리를 등한시한다'는 표현만 보면 도덕적 해이처럼 보이지만, 문장의 핵심 서술어는 '가입이 증가한다'이다. 보험 가입 전 고위험자가 더 많이 들어와 가입자 구성이 변하는 것은 역선택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계약 전인지 계약 후인지와 무엇이 변하는지를 함께 본다. 계약 전 위험 유형 때문에 고위험자의 가입 비중이 커지면 역선택이고, 계약 후 보장 때문에 건강관리·의료 이용·치료 선택이 달라지면 도덕적 해이이다.

암기 포인트

역선택은 '누가 가입하는가', 도덕적 해이는 '가입 후 어떻게 행동하는가'이다.

NoteBase

문 36. 아래와 같은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는 공공사업의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단, 할인율은 10%이다.)

	0기	1기	2기
비용	1,400	0	0
편익	0	550	1,210

① −330
② −100
③ 0
④ 100
⑤ 33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각 시점의 비용과 편익을 할인율 10%로 0기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빼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0기 비용: 1,400
1기 편익: 550
2기 편익: 1,210
할인율: 10%
구해야 할 값: 0기 기준 순편익의 현재가치

사용할 공식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각 시점의 순편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합산한다.

$$NPV = \sum_{t=0}^{n} \frac{B_t - C_t}{(1+r)^t}$$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은 0기의 금액과 직접 합산할 수 없으므로 할인율을 적용해 0기 가치로 바꾸어야 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0기 비용의 현재가치는 1,400이다.
2. 1기 편익의 현재가치는 $550/1.1 = 500$이다.
3. 2기 편익의 현재가치는 $1{,}210/(1.1)^2 = 1{,}000$이다.
4. 따라서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다.

$$-1{,}400 + 500 + 1{,}000 = 100$$

선지 판단

① X — 계산 결과는 -330이 아니라 100이다. 올바르게는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100이다.
② X — 계산 결과는 -100이 아니라 100이다. 올바르게는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100이다.
③ X — 할인된 편익의 합계는 1,500이고 비용의 현재가치는 1,400이므로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0이 아니라 100이다. 올바르게는 100이다.
④ O — $-1{,}400 + 550/1.1 + 1{,}210/(1.1)^2 = 100$이므로 옳다.
⑤ X — 계산 결과는 330이 아니라 100이다. 올바르게는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100이다.

오답 포인트

미래 편익 550과 1,210을 그대로 더하거나 할인기간을 한 기씩 잘못 적용하면 오답이 된다. 0기 금액은 할인하지 않고, 1기 금액은 1.1, 2기 금액은 1.1^2로 나눈다는 점이 핵심이다. 또한 비용은 음(-), 편익은 양(+)으로 반영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금흐름의 발생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각 금액을 $(1+r)^t$로 할인한 뒤 편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서 0기 기준 순편익을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현재가치는 미래 금액을 $(1+r)^t$로 나눈 값이며, 순편익은 할인된 편익에서 할인된 비용을 뺀 값이다.

NoteBase

문 37. 린달모형(Lindahl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공재에 관한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기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② 자발적 교환을 통한 공공재의 공급문제를 다루고 있다.

③ 린달모형은 개인 간 갈등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시사한다.

④ 개별 소비자의 공공재 비용 분담 비율은 소비자의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

⑤ 린달모형에서는 파레토 최적이 달성되지 않는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린달모형을 공공재의 자발적 교환 모형으로 이해하고, 개인별 조세가격의 결정 기준과 린달균형의 효율성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린달모형은 공공재에 대해 개인마다 한계편익에 따른 서로 다른 조세가격을 부담하게 하고, 모든 개인이 같은 공공재 공급량에 합의하는 균형을 찾는 자발적 교환 모형이다. 이론상 린달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부담을 줄이려고 선호를 축소해 밝힐 유인이 있어 진실한 선호 표출을 보장하기 어렵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기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이다. 개인은 자신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실제보다 낮게 밝힐 유인이 있으므로 무임승차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올바르게는 린달모형이 진실한 선호 표출을 전제로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략적 선호 은폐와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② O — 린달모형은 개인별 조세가격과 원하는 공공재 공급량을 조정하여 자발적 교환과 합의를 통해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을 결정하는 모형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시사한다'이다. 린달모형의 핵심은 정부의 강제적 갈등 조정이 아니라 개인들이 각자의 조세가격 아래에서 자발적으로 합의하는 교환 과정이다. 올바르게는 개인 간 자발적 합의를 통해 공공재 공급과 비용 분담을 결정하는 모형이라고 해야 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소비자의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이다. 개인의 비용 분담 비율은 소득이 아니라 공공재에 대한 한계편익 또는 지불의사에 기초한 개인별 조세가격으로 결정된다.

⑤ X — 틀린 표현은 '파레토 최적이 달성되지 않는다'이다. 린달균형에서는 각 개인의 한계대체율 합계가 공공재 생산의 한계변환율과 일치하는 효율적 공급 조건이 충족되므로, 이론적 전제 아래 파레토 최적이 달성된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①은 린달모형이 선호에 맞춘 개인별 조세가격을 사용한다는 점을 '진실한 선호가 자동으로 표출된다'는 주장으로 바꾼 선지이다. 또한 ④는 개인별 부담 차이를 소득 차이로 오해하게 만들고, ⑤는 현실적 실행의 어려움과 이론적 효율성을 혼동하게 만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린달모형은 '개인별 조세가격·자발적 교환·합의된 동일 공급량·파레토 효율'로 판단한다. 다만 진실한 선호 표출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므로 무임승차와 전략적 선호 은폐는 현실적 한계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린달균형은 개인별 한계편익에 따른 조세가격으로 자발적 합의를 이루는 파레토 효율적 공공재 공급 모형이다.

NoteBase

문 38.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간이 30년으로 설정된 어떤 공공투자 사업은 첫 해에 비용이 모두 발생하는 반면, 편익은 분석의 전 기간에 걸쳐 매년 동일한 크기로 발생한다. 사회적 할인율이 r일 때, 비용편익분석 결과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0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만약 r보다 높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면, 이 사업의 편익/비용 비율은 1보다 더 커질 것이다.
ㄴ. 만약 r보다 높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면, 이 사업의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0보다 더 커질 것이다.
ㄷ. 만약 r보다 높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면, 이 사업의 내부수익률은 더 작아질 것이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사회적 할인율이 높아질 때 미래에 걸쳐 발생하는 편익의 현재가치와 첫해에 발생하는 비용의 현재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내부수익률이 할인율 선택과 무관한 사업 자체의 수익률임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비용은 첫해에 모두 발생하고, 동일한 편익은 30년 동안 매년 발생한다. 할인율이 r일 때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0이므로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는 같다. 편익에는 비용보다 뒤에 발생하는 금액이 포함되므로 할인율 상승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사용할 공식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다.
$NPV(i) = PV(B; i) - PV(C; i)$
편익·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B/C = \frac{PV(B; i)}{PV(C; i)}$
내부수익률 IRR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할인율이다.
$NPV(IRR) = 0$
이 사업은 할인율 r에서 $NPV = 0$이므로 r이 내부수익률이다.

NoteBase

판단 과정

할인율을 r보다 높이면 뒤에 발생하는 편익일수록 할인 폭이 커진다. 비용은 첫해에 집중되어 있지만 편익은 30년에 걸쳐 분산되므로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한다. 따라서 B/C는 1보다 작아지고 NPV는 0보다 작아진다. 한편 내부수익률은 주어진 비용·편익 흐름이 결정하므로 평가에 적용하는 사회적 할인율을 바꾸어도 변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만을 옳지 않은 설명으로 고른 조합이지만 ㄱ·ㄴ·ㄷ이 모두 옳지 않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② X — ㄱ, ㄴ만을 고른 조합은 ㄷ을 빠뜨렸다. 사회적 할인율을 높여도 사업의 내부수익률은 작아지지 않고 변하지 않으므로 ㄷ도 옳지 않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③ X — ㄱ, ㄷ만을 고른 조합은 ㄴ을 빠뜨렸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편익의 현재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하여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0보다 작아지므로 ㄴ도 옳지 않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④ X — ㄴ, ㄷ만을 고른 조합은 ㄱ을 빠뜨렸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편익·비용비율은 1보다 커지는 것이 아니라 1보다 작아지므로 ㄱ도 옳지 않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⑤ O — ㄱ은 $B/C < 1$, ㄴ은 $NPV < 0$, ㄷ은 내부수익률 불변으로 각각 고쳐야 하므로 ㄱ, ㄴ, ㄷ이 모두 옳지 않다.

오답 포인트

할인율이 높아지면 모든 현재가치가 감소한다는 사실만 보고 편익과 비용이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핵심은 발생 시점이다. 뒤로 길게 분산된 편익이 첫해에 집중된 비용보다 할인율 상승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또한 사회적 할인율은 평가자가 적용하는 기준이고, 내부수익률은 사업의 현금흐름에서 산출되는 값이므로 둘을 혼동하면 ㄷ을 놓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할인율 변화 문제에서는 먼저 비용과 편익의 발생 시점을 비교한다. 더 늦게 발생하는 흐름의 현재가치가 할인율 변화에 더 민감하다. 그다음 B/C와 NPV의 방향을 판단하고, 내부수익률은 적용 할인율이 아니라 현금흐름 자체가 결정한다는 점을 분리한다.

암기 포인트

할인율 상승은 먼 미래의 편익을 더 크게 깎는다. B/C 하락, NPV 하락, IRR 불변이다.

NoteBase

문 39. 소득의 불평등도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두 로렌츠곡선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 소득 불평등도를 서로 비교할 수 없다.

② 지니계수는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을 로렌츠곡선 아래의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③ 균등분배 대등소득과 평균 소득이 일치하면 앳킨슨지수는 0이 된다.

④ 5분위배율은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가 커질수록 값이 커진다.

⑤ 달튼(H. Dalton)의 평등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앳킨슨지수, 5분위배율, 달튼의 평등지수가 소득분배의 평등·불평등을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로렌츠곡선은 누적 인구비율과 누적 소득점유율의 관계를 나타내며, 완전평등선에서 더 멀수록 불평등이 크다.
지니계수는 완전평등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을 완전평등선 아래 전체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앳킨슨지수는 균등분배 대등소득을 평균소득과 비교하며, 0이면 완전평등을 뜻한다.
5분위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20%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이므로 클수록 불평등하다.
달튼의 평등지수는 실제 사회후생을 균등분배 때의 최대 사회후생과 비교한 값으로, 작을수록 불평등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두 로렌츠곡선이 교차하면 어느 곡선도 전 구간에서 다른 곡선보다 완전평등선에 가깝다고 할 수 없으므로, 로렌츠 우위 기준만으로는 두 분배의 불평등도를 일관되게 비교할 수 없다.
② X. 틀린 부분은 분모를 '로렌츠곡선 아래의 면적'이라고 한 것이다. 지니계수의 분모는 완전평등선 아래의 전체 삼각형 면적이며, 지니계수는 '완전평등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 ÷ 완전평등선 아래 전체 삼각형 면적'이다.
③ O. 앳킨슨지수는 1에서 '균등분배 대등소득 ÷ 평균소득'을 뺀 값이다. 균등분배 대등소득과 평균소득이 같으면 그 비율이 1이므로 앳킨슨지수는 0이 되어 완전평등을 의미한다.
④ O. 5분위배율은 상위 20% 소득점유율을 하위 20%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불평등이 커져 상위 몫이 상대적으로 커지거나 하위 몫이 작아지면 이 비율은 커진다.
⑤ O. 달튼의 평등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따라서 제시된 설명은 옳다.

오답 포인트

②는 지니계수의 분자와 분모에 쓰이는 면적을 혼동하게 만든다. 로렌츠곡선 아래 면적은 완전평등선 아래 전체 삼각형 면적의 일부일 뿐이므로 지니계수의 분모가 아니다. 또한 로렌츠곡선이 교차할 때의 ①은 모든 불평등지수가 반드시 같은 결론을 낸다는 뜻이 아니라, 로렌츠 우위 기준만으로는 순위를 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지표의 기준점을 먼저 확인한다. 지니계수는 완전평등선 아래 전체 삼각형을 분모로 삼고, 앳킨슨지수는 0이 평등이며, 5분위배율은 클수록 불평등하고, 달튼의 평등지수는 작을수록 불평등하다. 로렌츠곡선이 교차하면 로렌츠 우위에 의한 비교는 불가능하다.

암기 포인트

지니의 분모는 '완전평등선 아래 전체', 앳킨슨 0은 평등, 5분위배율은 클수록 불평등, 달튼 평등지수는 작을수록 불평등이다.

NoteBase

문 40. 국가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면, 국채상환에 대비한 저축이 증가하여 이자율이 오르지 않아서 구축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국채발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원화 환율이 하락하여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③ 러너(A. Lerner)로 대표되는 국채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내부채무의 경우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

④ 이자율 하락은 국채의 시장가치를 상승시켜 정부부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⑤ 중복세대모형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국채가 저축·이자율·환율·경상수지에 미치는 효과와 국가채무의 세대 간 부담에 관한 견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리카도 대등정리는 합리적인 경제주체가 국채발행을 미래 조세의 증가로 예상하여 현재 저축을 늘리므로, 조세감면에 따른 소비 증가와 구축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러너의 전통적 견해에서는 내부채무의 원리금 지급이 미래 시점의 국민 사이에서 납세자에게서 국채 보유자에게로 이전될 뿐이므로, 내부채무 자체의 부담이 미래세대 전체에 전가되지 않는다. 반면 중복세대모형에서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 국채의 편익과 상환 부담이 서로 다른 세대에 귀속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면 민간은 장래의 국채상환을 위한 조세 증가를 예상해 저축을 늘린다. 따라서 자금 수요 증가에 따른 이자율 상승과 민간투자 구축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O — 국채발행 증가는 이자율을 높여 해외자본 유입을 유발하고 원화를 절상시킨다. 원화가 절상되면 원화로 표시한 환율은 하락하며,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
③ X — 틀린 부분은 '내부채무의 경우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이다. 러너의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내부채무의 상환은 미래 시점의 국내 구성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전이므로 미래세대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는다.
④ O — 시장이자율과 기존 국채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기존 국채의 현재가치와 시장가격이 상승하므로 시장가치로 평가한 정부부채가 증가한다.
⑤ O — 중복세대모형에서는 국채발행의 편익을 현재 세대가 누리고 상환 재원을 위한 조세를 미래 세대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국가채무의 부담이 미래세대로 전가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내부채무도 결국 미래의 조세로 갚는다'는 점만 보고 세대 전체의 부담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러너는 미래 시점의 납세자와 국채 보유자 사이의 소득이전과 미래세대 전체의 순부담을 구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채 부담 문제에서는 먼저 내부채무인지 외부채무인지, 세대 간 이전을 허용하는 모형인지 확인한다.
거시효과는 '국채발행 증가 → 이자율 상승 → 자본유입 → 원화 절상 → 원화표시 환율 하락 → 경상수지 악화'의 연결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리카도는 저축 증가로 구축효과 없음, 러너는 내부채무의 세대 전체 부담 전가 없음, 중복세대모형은 미래세대 부담 전가이다.